


의정활동보고서



제215회 임시회(2007. 5. 17 ~ 5. 25)



경 상 북 도 의 회

개 회 사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나날이 푸르름을 더해가는 신록의 계절을 맞이하여 오늘부터 9일간의 일정으로 제215회 임시회가 열리게 됨을 매우 뜻깊게 생각하며, 건강한 모습으로 다시 만나뵙게 되어 대단히 반갑습니다.

그동안 여러 가지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도민의 복리증진을 위하여 불철주야로 의정활동에 전념해오신 동료의원 여러분께 경의를 표하며, 아울러 산불예방과 도민체전, 한·미FTA 대책, 예산확보 등 도정과 교육행정 발전을 위하여 열심히 노력해오신 집행부 공무원 여러분의 노고에 대하여도 진심으로 치하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5월은 가정의 달입니다.

안타깝게도 오늘날에는 이혼율이 증가하고 어린이나 노인들이 제대로 보호받지 못하는 등 가정의 질서가 흐트러지고 문제의 가정이 늘어나 우리 모두를 가슴 아프게 하고 있습니다.

갈수록 심각해지는 인간성 상실과 각종 범죄발생의 증가는 우리에게 가정의 소중함과 가치를 다시 한 번 생각해 보게 합니다.

가정이라는 울타리 속에서 용서와 나눔으로 서로를 살리는 따뜻한 사랑의 보금자리를 만들고, 건전한 가정문화를 가꾸어 나갈 때 비로소 인간은 인류라 말할 수 있습니다.

가정의 소중함은 아무리 강조하여도 지나치지 않을 뿐 아니라 가정이 건전하면 사회도 건전하고, 나아가 국가도 건전하게 발전한다는 사실을 깊이 명심하여 어려운 이웃들과 소외계층도 함께 보살피고 아우르는 계기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이번 회기에는 도정질문이 계획되어 있습니다. 이번 임시회를 통하여 도정질문을 하시는 의원님들께서는 도정 전반에 대한 심도 있는 질문으로 도민들의 궁금증을

속시원히 해소하는 한편 훌륭한 정책대안도 많이 제시함으로써 수준 높은 민의의 전당이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집행부에서는 의원님들의 질문이 곧 도민의 목소리임을 깊이 명심하여 질문에 대하여 성실하게 답변하여 주시는 한편, 건전한 대안에 대해서는 도민들의 요구사항이 도정에 적극 반영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노력해주시기 바랍니다.

존경하는 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집행부 관계 공무원 여러분!

이번 도정질문을 통하여 금년도 도정과 교육행정의 주요시책에 대하여 다시 한 번 따져보고 살피는 것은 물론, 견제와 감시기능을 잘 활용하고 미래지향적인 정책대안도 함께 제시하시어, 도민들이 직접 피부로 느끼고 더한층 공경 받는 의회가 되도록 노력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집행부에서도 금년에 계획된 도정이 차질 없이 진행되고 있는지 점검을 해보고 미진한 부분에 대해서는 추진에 박차를 가하여 지역의 균형발전과 풍요롭고 살기 좋은 경북건설이 앞당겨질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지금 우리 사회는 여러모로 어려움에 처해 있습니다. 연말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후보경선 문제 등으로 어수선한 분위기에 휩싸여 있습니다.

이런 때일수록 우리는 중심을 바로 잡고, 의회와 집행부가 서로 머리를 맞대어 함께 고민하고 지혜를 모아, 도민들이 희망을 가지고 안심하고 생업에 전념할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는 한편, 갈수록 심해지는 빈부격차와 사회 양극화 현상 해소에 우리 모두 적극 발 벗고 나서야 하겠습니다.

아무쪼록 이번 회기에서도 건강한 모습으로 활발한 의정 활동을 펼쳐주실 것을 기대하면서,

이 자리에 계신 모든 분들의 건승과 가정에 행복이 늘 가득하시기를 기원드리며 개회사를 갈음합니다.

감사합니다.

2007년 5월 17일

경상북도의회 의장 **李 相 千**

차 례

I. 개 황	11
II. 의사일정	12
1. 소 집	12
2. 회 기	12
3. 활 동	13
가. 본회의	13
나. 위원회	14
III. 의안 처리	17
1. 본회의	17
2. 위원회	18
IV. 민원 처리	20
1. 청 원	20
2. 진 정	20
가. 접 수	20
나. 처 리	21

V. 본회의 보고사항 22

 1. 의안 접수사항 22

 2. 조례공포 사항 23

 3. 의원 신분 변동사항 23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23

 5. 기타 의정활동사항 24

VI. 5분 자유발언 28

VII. 도정질문 31

부 록

□□ 조례안.....2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승인·동의안.....4

1.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 기타안.....4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I. 개 황

경상북도의회 제215회 임시회는 2007년 5월 17일 본회의를 개최하여 5월 25일까지 9일간의 회기 동안 3차의 본회의와 연 16회의 상임 위원회를 개최하였다.

이번 임시회 본회의 의사운영 내용을 개관해보면,

5월 17일(목) 오전 11시에 제1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제215회 임시회 회기 결정의 건,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 휴회의 건을 처리하고 도정에 관한 질문 (조동만·최윤희·고우현 위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5월 18일(금) 오전 11시에 제2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도정에 관한 질문(박진현·손진영·전찬걸 위원)을 청취한 후 산회했다.

5월 19일부터 5월 24일까지 상임위원회별로 안건 처리와 현지확인 등을 실시하였다.

5월 25일(금) 오전 11시에 제3차 본회의를 개의하여 5분 자유발언(박노욱 의원)을 청취한 후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등 5건의 제·개정조례안과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2006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등을 의결하고 임시회를 폐회하였다.

II. 의사일정

1. 소 집

가. 집회구분 : 임시회

나. 소집근거 : 지방자치법 제39조

다. 집회공고 : 경상북도의회 공고 제2007-10호(2007년 5월 3일)

라. 집회일시 : 2007년 5월 17일(목) 11:00

2. 회 기

가. 회의기간 : 2007년 5월 17일~5월 25일(9일간)

나. 개의회수

○ 본회의 : 3회(누계 25회)

○ 위원회

구 분	계	의회 운영	기획 경제	행 정 보건복지	교육 환경	농수산	통상 문화	건설 소방	예결 특위
214회 까지	199	13	30	28	30	26	24	32	16
215회	16	1	3	2	4	2	1	3	
누 계	215	14	33	30	34	28	25	35	16

※ 누계는 제8대 의회 누계

3. 활 동

가. 본회의

개의일시	심 의 안 건	비 고
2007. 5. 17(목) 11:00 (제1차)	1. 제215회 경상북도의회 임시회 회기결정의 건 2. 회의록 서명의원 선임의 건 3. 휴회의 건 4. 도정에 관한 질문 ○ 조동만 의원(농수산) ○ 최윤희 의원(통상문화) ○ 고우현 의원(건설소방)	
2007. 5. 18(금) 11:00 (제2차)	1. 도정에 관한 질문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 ○ 손진영 의원(행정보건복지)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	
2007. 5. 25(금) 11:00 (제3차)	1. 5분 자유발언 ○ 박노욱 의원(농수산) 2.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3.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4.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5.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6.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7.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8.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 기간 연장의 건	원안가결 수정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원안가결

나. 위원회

<의회운영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7. 5. 17(목) 14:00 (제1차)	1. 제216회 경상북도의회 제1차 정례회 회기협회의 건	원안가결

<기획경제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내용)	비고
2007. 5. 18(금) 16:00 (제1차)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원안가결
2007. 5. 22(화)	1. 현지확인(경주) ○ 경주세계문화엑스포장 ○ 경주월성원자력발전소 ○ 중저준위 방사성폐기물 처분시설	
2007. 5. 23(수)	1. 현지확인(경주) ○ 한국섬유개발연구원, 한국염색기술연구소(대구) ○ 코오롱 구미공장 방문	

<행정보건복지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5. 18(금) 11:00 (제1차)	1.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2.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3. 현지확인(경북학숙)	원안가결 수정가결
2007. 5. 23(수) 15:00	1. 보육조례 제정 공청회 ○ 장 소 : 도청강당 ○ 참 석 : 200명 정도 · 도의장, 행정보건복지위원, 보육관련단체 보육교사 등	

<교육환경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5. 18(금) 15:00 (제1차)	1. 경상북도 운행차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2. 2007년도 교직원 명퇴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원안가결 원안가결
2007. 5. 21(월) ~5. 23(수) (3일)	1. 제주특별자치도 비교 견학 ○ 제주도의회 방문(교육위원회 운영 등) ○ 국제정보교육원, 한라생태숲, 절물 휴양림 등	

<농수산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5. 21(월) ~5. 22(화) (2일)	1. 현지확인 ○ 생물자원연구소(안동) ○ 영양고추시험장, 영양고추유통공사	

<통상문화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5. 22(화)	1. 문화관광산업 발전을 위한 간담회 ○ 의회 자문교수 주제발표 등	경북관광 개발공사

<건설소방위원회>

개의일시	심사안건 (내용)	비고
2007. 5. 21(월) 11:00 (제1차)	1.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2. 현지확인 ○ 칠곡 지천 ~ 가산간 도로 확·포장 공사 현장	원안가결
2007. 5. 22(화) ~5. 23(수) (2일)	1. 현지확인 ○ 군위 화북댐 건설현장 ○ 지역개발 실태 파악 등	

Ⅲ. 의안처리

1. 본회의

구 분	부 의	심의·의결				철 회	계 류	비 고
		계	가 결		부 결			
			원 안	수 정				
계	8 (93)	8 (93)	7 (72)	1 (21)				
조 례 안	소 계	5 (60)	5 (60)	4 (45)	1 (15)			
	의 회 제 안	2 (15)	2 (15)	1 (11)	1 (4)			
	도지사 제 출	3 (32)	3 (32)	3 (25)	(7)			
	교육감 제 출	(13)	(13)	(9)	(4)			
예산·결산	(8)	(8)	(2)	(6)				
동의·승인	1 (9)	1 (9)	1 (9)					
건 의 안	(3)	(3)	(3)					
결 의 안	(6)	(6)	(6)					
기 타 안	2 (7)	2 (7)	2 (7)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 의안 내용은 붙임 부록에 게재

2. 위원회

위원회	회부	심 사 · 의 결							부결	철회	계류
		가 결									
		계	조례	예산 결산	동의 승인	건의	결의	기타			
계	7 (98)	8 (93)	5 (60)	(8)	1 (9)	(3)	(6)	2 (7)	(4)		(1)
의회운영	1 (13)	1 (12)	(6)		(1)		(3)	1 (2)	(1)		
기획경제	1 (18)	1 (16)	1 (13)		(2)	(1)			(1)		(1)
행 정 보건복지	1 (17)	2 (17)	2 (14)		(3)						
교육환경	2 (20)	2 (19)	1 (16)		1 (3)				(1)		
농 수 산	(3)	(3)	(1)			(1)	(1)				
통상문화	(5)	(4)	(1)			(1)	(2)		(1)		
건설소방	1 (8)	1 (8)	1 (8)								
특 별	(8)	(8)		(8)							
본 회 의	1 (6)	1 (6)	(1)					1 (5)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상임위 부결(본회의 부의하지 않기로 결정) 4건>

- ① 경상북도교육감 행정권한의 위임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06. 8. 4 교육감제안, ’06. 12. 18 교육환경위원회 부결)
- ② 경상북도중소기업육성기금 설치 및 운영에 관한 조례안
(’06. 11. 8 도지사제안, ’06. 11. 29 경제통상위원회 부결)
- ③ 경상북도 도청이전을 위한 조례안
(’06. 12. 8 도지사제안,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 ④ 구미시장의 공무원을 동원한 코오롱정리해고자 농성장 강제철거
진상조사특별위원회 구성결의안
(’06. 12. 6 김숙향의원 외 13인 발의, ’07. 1. 24 기획경제위원회 부결)

<상임위 계류 중인 안건 : 1건>

- ① 경상북도 보조금관리조례 일부개정조례안(기획경제위원회)

IV. 민원처리

1. 청 원

구 분	접 수			처 리	처리중
	계	이 월	금 회		
금 회					
누 계					

※ 누계는 제8대 의회 실적

2. 진 정

가. 접 수

위원회	계	행 정	사회문화	교 통	건 설	교 육	경 제	환 경	농어업	기 타
계	(16)	(1)	(1)	(3)	(4)	(1)		(4)	(2)	
의회운영										
기 경 제 학	(2)			(2)						
행 정 보 건 복 지	(2)	(1)	(1)							
교육환경	(4)					(1)		(3)		
농 수 산	(2)								(2)	
통상문화	(2)			(1)				(1)		
건설소방	(4)				(4)					
특 별 위 원 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나. 처 리

위원회	처 리					처리중
	계	처 리	불수리	취 하	타기관 이 송	
계	(16)	(16)				
의 회 운 영						
기 획 경 제	(2)	(2)				
행 정 보 건 복 지	(2)	(2)				
교 육 환 경	(4)	(4)				
농 수 산	(2)	(2)				
통 상 문 화	(2)	(2)				
건 설 소 방	(4)	(4)				
특별위원회						

※ ()내는 제8대 의회 누계

V. 본회의 보고사항

1. 의안 접수사항

제 출 자 (제 출 일)	의 안 명	소관위원회 (회 부 일)
박기진 의원 의 22 (2007. 4. 30)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건설소방위원회 (2007. 5. 1)
경상북도교육감 (2007. 5. 7)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5. 8)
경상북도지사 (2007. 5. 8)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기획경제위원회 (2007. 5. 8)
경상북도지사 (2007. 5. 8)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행정보건복지위원회 (2007. 5. 8)
경상북도지사 (2007. 5. 8)	경상북도 운행자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교육환경위원회 (2007. 5. 8)

2. 조례공포 사항

이 송 일	이 송 처	건 명	비 고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5. 14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07. 5. 14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새마을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5. 14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공여구역 주변지역 등 지방발전위원회 조례	2007. 5. 14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시계획조례 일부개정조례	2007. 5. 14
2007. 4. 24	경상북도 지 사	경상북도 도로보수건설기계 운영 관리 조례 전부개정조례	2007. 5. 14

3. 의원 신분 변동사항

선 거 구	성 명	변동내역(일자)	비 고
청도군 제2선거구	김 동 인 (농수산위원회)	의원신분상실(2007. 4. 26)	대법원 판결 (선거법 위반)

4. 상임위원회 활동사항

위원회	일시(기간)	장 소	활 동 내 용
행정보건복지 위 원 회	2007. 4. 24	위원회 회의실	<ul style="list-style-type: none"> 경상북도 보육조례제정을 위한 2차 자문회의

5. 기타 의정활동사항

○ 2007 행정·산업 정보박람회

- 일 시 : 2007. 4. 12(목) 11:00
- 장 소 : EXCO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도청이전 특별법 제정관련 MOU 체결식

- 일 시 : 2007. 4. 12(목) 14: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박진현 기획경제부위원장

○ 장애인의 날 기념 및 한마당잔치

- 일 시 : 2007. 4. 17(화) 10:30
- 장 소 : 포항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40회 과학의 날

- 일 시 : 2007. 4. 17(화) 10:30
- 장 소 : 경산 시민회관 대강당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제27회 장애인의 날 기념식

- 일 시 : 2007. 4. 20(금) 11:00
- 장 소 : 구미 박정희 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사회단체장 초청 경북방문의 해 간담회

- 일 시 : 2007. 4. 23(월) 10:30
- 장 소 : EXCO
- 참 석 : 이상천 의장

○ 경북·대구 광역의원 친선 체육대회

- 일 시 : 2007. 4. 24(화) 14:00
- 장 소 : 대구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도청이전 추진위원회 제1차 회의

- 일 시 : 2007. 4. 24(화) 15:00
- 장 소 : 도청 제1회의실
- 참 석 : 이현준 기획경제위원장, 송필각 의원

○ 결산검사위원 위촉장 수여

- 일 시 : 2007. 4. 25(수)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1C 경북울곡포럼』 창립 및 제1차 포럼

- 일 시 : 2007. 4 26(목) 11:00
- 장 소 : 대구 제이스호텔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전국 수산업경영인 대회

- 일 시 : 2007. 4 27(금) 10:30

- 장 소 : 포항 시민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제38차 경북지구JC 회원대회

- 일 시 : 2007. 4 29(일) 16:00
- 장 소 : 문경 실내체육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도의원

○ 자문교수 및 고문변호사 위촉장 교부

- 일 시 : 2007. 4. 30(월) 11:0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김응규 운영위원장
이종원 농수산부위원장

○ 2007 친환경 농업인 교육 및 연찬회

- 일 시 : 2007. 5. 1(화) 10:00
- 장 소 : 포항 흥해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21C 새마을운동 출범식

- 일 시 : 2007. 5. 3(목) 14:00
- 장 소 : 안동 실내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도농상생 경북여성 지도자 대회

- 일 시 : 2007. 5. 7(월) 13:30
- 장 소 : 구미 박정희체육관
- 참 석 : 이상천 의장

○ 전국 시·도의회 운영위원장 협의회

- 일 시 : 2007. 5. 10(목) 14:30
- 장 소 : 대전광역시 의회
- 참 석 : 김응규 운영위원장

○ 컨테이너 이용확약에 관한 MOU체결

- 일 시 : 2007. 5. 11(금) 11:00
- 장 소 : 포항시청 대회의실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도민체전 개회식

- 일 시 : 2007. 5. 11(금) 16:00
- 장 소 : 상주종합운동장
- 참 석 : 이상천 의장, 도의원

○ 제4회 새마을여인상 시상식 및 행복한 가정가꾸기 실천대회

- 일 시 : 2007. 5. 15(화) 15:00
- 장 소 : 의성군 문화회관
- 참 석 : 안순덕 부의장

○ 중국 영하회족자치구 인민대표회의 상무위원회 방문

- 일 시 : 2007. 5. 16(수) 17:30
- 장 소 : 의장실
- 참 석 : 의장단, 상임위원장

VI. 5분 자유발언

□□ 2007년 5월 25일(금) 제215회(임시회) 제3차 본회의

◎ 박노옥 의원(농수산위원회) ◎

봉화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박노옥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제215회 임시회에서 5분발언의 기회를 주신 것에 대해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최근 들어 공공시설 건설사업을 BTL로 추진하는 사례가 많아졌습니다. BTL사업이라 하면 잘 아시는 바와 같이 민간이 공공시설을 짓고 정부가 이를 임대해서 쓰는 방식을 말합니다. 이는 당장 목돈을 들이지 않고도 재정사업을 할 수 있다는 이유로 국가적으로 조기 확충이 필요한 사회기반시설을 중심으로 활발하게 추진되고 있습니다.

특히 교육부문에 있어서 BTL사업은 재원부족으로 보류되거나 지연되고 있는 사업의 조기 완성을 가능케 하여 교육서비스의 획기적 개선은 물론 교육인프라의 조기 구축과 경기 부양을 통한 일자리 창출이라는 긍정적 효과를 낳고 있기도 합니다.

그러나 교육청을 비롯한 공공기관 발주공사 상당부분이 BTL 즉, 임대형방식으로 바뀌면서 상대적으로 외부 대형건설업체에 비해 정보력과 자금력이 부족한 지방건설업체들은 공사 수주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등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어 대책마련이 요구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물론 이에 대하여 보완책이 점차 마련되고 있어 앞으로 개선이

이루어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지만 이보다 더 큰 문제는 BTL사업의 시행과정에서 학생들과 학부모가 많은 불편함을 감수해야 하면서도 BTL사업과 관련한 결정 과정에 아무런 참여 권한이 없다는 것입니다. 그로 인해 BTL사업은 민간투자사업인 만큼 협상을 진행해나가는 과정에서 기간이 길어져 예정된 기일 안에 공기를 마칠 수 없는 일들이 발생하고 있으며, 이에 학생과 학부모들의 불편함은 가중되고 있습니다.

실례로 도교육청은 지난해에 지역 거점학교 육성을 위해 봉화여·중고와 봉화중·고등학교의 통합 운영을 결정한 바 있습니다. 이에 지난해 10월 민간투자사업을 고시하고 2007년 1월에 협상자를 지정, 3월에 실시협약 체결 및 사업시행자 지정, 그리고 오는 8월에 실시설계 및 실시계획 승인을 거쳐 공사에 착수하여 2008년 8월에 학교 신축사업을 마무리할 계획입니다.

이러한 계획에 따라 봉화중·고 자리에 학교신축을 추진키로 하고 대신에 봉화여중·고에서 컨테이너로 임시교실을 설치하여 12개 학급이던 것을 현재 24개 학급으로 늘려 열악한 환경에서 통합수업을 실시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공사는 금년 8월에 착공 예정임에도 불구하고 이미 1학기부터 통합수업을 강행하여 학생들에게 불편을 초래하는가 하면 최근 사업시행자와 세부적인 평가협상이 원만하게 이루어지지 않아 8월에 착공이 어려워질 것으로 예상되고 있어 그동안 컨테이너 임시교실에서 수업하고 있는 학생들의 불편함은 더욱 가중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금년 8월 착공예정 계획과 통합 이전한다는 사항은 학교

운영위원회에서 사전 동의도 받지 않은 것으로 드러나는 등 사업 추진과정에 교육청, 학교, 건설업체의 뜻만 반영되고 학생들과 지역의 학부모들은 그저 결정되는 대로 따라오라는 방식의 행정을 하고 있어 큰 문제점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또한 교육청 관계자는 공기(工期) 지연에 대해 사전에 예상을 했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민간투자사업이기 때문에 협상 기간이 길어질 수밖에 없었다는 사업추진에 대한 안일한 자세는 학부모와 학생들의 의견 수렴과 입장을 전혀 생각지 않는 말로만 열린행정이 라는 행태라고 여겨집니다.

이에 본의원은 학생과 학부모들에게 지금이라도 공사 일정과 학교 운영계획 등을 충분히 협의하여 설명회를 개최하는 등 필요한 조치와 이해를 구하고 투명하게 추진함으로써 민원발생의 소지가 없도록 하는 것이 올바른 길이라 보여집니다.

따라서 본의원은 향후 BTL사업의 경우 사업 확정과 동시에 곧바로 공사업체를 선정하여 착공 전 시간 허비를 막음으로써 학생들의 불편을 최소화하고 기간 내 공사가 건실하게 이루어지도록 함은 물론 이러한 사업과 관련해서는 학생과 학부모들의 참여를 통해 의견을 수렴하여 계획을 결정해야 한다고 생각되므로 지금이라도 공사계획과 학교 운영계획 등에 대한 설명회를 갖고 충분한 이해를 구하는 방안을 강구하도록 강력히 촉구하는 바입니다.

이상 본의원의 5분자유발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신 것에 깊이 감사드립니다.

감사합니다.

VII. 도정질문

□□ 2007년 5월 17일(목) 제215회(임사회) 제1차 본회의

◎ 조동만 의원(농수산위원회) ◎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발전을 위해 불철주야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앞으로 우리나라를 이끌어 나갈 인재양성을 위해 수고가 많으신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공무원 여러분!

영양군 출신 농수산위원회 소속 조동만 의원입니다.

오늘 제215회 임사회에서 제일 먼저 본의원에게 도정질문의 기회
를 주신 데 대하여 감사드리며 몇 가지 현안에 대하여 질문을 하고자
합니다.

첫째,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운영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현재 산업자원부가 추진 중인 1단계 9개 지역 전략산업진흥사업
종료 후 구축된 특화센터인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과 울진
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등의 효율적이며 지속적이고 구체
적인 운영방안이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경북은 2002년부터 산업자원부가 추진하고 있는 지역전략산업
진흥사업을 통하여 지방대응자금을 포함하여 적게는 200억, 크게는
900억원 규모의 센터를 각 기초지자체에서 건립하여 운영 중입니다.

구미 전자산업진흥원,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의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 영천의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 포항의 Steel표면가공통합기술지원센터를 각 지자체에서 건립 완료 또는 건립 중에 있으며, 이 센터들은 경북지역 전략산업 및 각 전략산업 관련 우수업체 유치 및 입주유도, 기업지원, 장비대여, 연구개발 등의 역할 및 클러스터 구축을 위한 중추적 기관으로 자리매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그러나 건립된 특화센터들의 가장 큰 문제점은 건물 및 장비 구축 등 하드웨어 구축이 완료된 뒤 운영비 관련은 보조금 형태로 지원되고 있는 상황이어서 지속적이고 안정된 운영을 위한 대응책이 필요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이에 따른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첫째, 구미전자산업진흥원, 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경북해양바이오산업연구원의 경우 2002년부터 사업이 진행되고 있고 건립이 대부분 완료된 것으로 알고 있으나 향후 센터운영을 위한 연구원 현황, 즉 전문성, 우수인력 정도 및 처우 정도, 신분보장에 관한 사항과 고가 기자재·장비 유지 등 운영비 지원현황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고, 둘째, 산업자원부 추진 1단계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이 2007년 종료된 후 2단계사업이 2008년부터 시작되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지역의 여건 및 비영리 법인의 성격상 아직 센터 자체 내의 자립은 불가능한 상태이며, 산업자원부 2단계사업의 예산규모도 확정되지 않은 상태에서 이미 고가장비를 포함하여 1,000억원이 넘게 투자된 센터의 자율적이고 안정적인 운영방안 마련을 통하여, 센터 내 실질적 운영주체라 할 수 있는 재직 중인 우수 연구인력 유출

등을 사전에 방지하는 등 적극적 대응방안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산업자원부의 2단계사업이 없을 경우를 포함한 향후 운영방안에 대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지역 자체 한·미FTA 대응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한·미FTA 협정이 마무리 되어 국회비준도 통과할 전망이어서 정부차원의 대비책을 고려한 경북지역 내 산업에 미칠 영향에 대한 사전 대비책이 절실한 실정이며, 이를 위해 경북도가 대정부 정책 대비 및 자체대처방안을 설정하여 추진에 만전을 기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앞으로 전개될 EU FTA, 캐나다, 중국과 이어질 FTA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걱정을 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그 추진 방안에 대하여 질문 드리겠습니다.

한·미FTA 협정내용이 경북 전체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볼 때 전자정보, 부품소재, 섬유 및 자동차산업에는 긍정적으로 평가되고 있는 반면, 한우를 비롯해 사과, 복숭아, 포도 생산은 전국 1위이고, 기타작물 생산에 있어서도 상위그룹을 차지하는 등 국내최대 농업생산지인 경북 농업분야는 엄청난 타격의 파장이 예상되고 있습니다.

4월 30일 대외경제연구원 등 11개 국책연구기관에서 발표한 농업분야 전국 피해규모는 이행 15년차 기준으로 볼 때 연간 축산물은 6,797억원, 과수는 2,787억원, 곡물과 채소특작물은 778억원 등 총 1조 361억원에 달하며,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쇠고기는 관세 철폐로 연간 3,147억원, 돼지고기는 1,874억원 가량의 생산 감소가 예상되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특히, 경북의 농업분야는 낙후지역인 경북 북부지역에 집중되어 있어 현재 급격하게 진행 중인 낙후지역 공동화와 경북 남부와 북부 지역 간의 생활격차가 더욱 심화될 전망이어서 산업분야별 대책방안 뿐만 아니라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한 구체적 경제 활성화 및 지원방안이 절실한 실정입니다.

경상북도에서는 한·미FTA 타결과 관련하여 한우산업 육성을 위해 1,870억원을 투입하고, 올해부터 2016년까지 10년간 모두 4조 543억원을 투입하는 『경북농업 10대 프로젝트』를 추진하는 등 농업 분야의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한 방안을 내놓고 있으나, 아직까지 구체적 피해예상 현황 및 지역 내 파급효과조차 제대로 분석되지 않은 상황에서 정부의 농업분야에 대한 정책방향 결정에 영향을 미치기에는 설득력이 떨어질 수밖에 없고□□우는 아이에게 사탕하나 더 주면 받는 식□□의 당위성을 잃은 요구에 그칠 가능성이 많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경상북도의 향후 추진방향을 가장 큰 피해가 예상되는 경북 북부지역을 중심으로 답변하여 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앞으로 전개될 EU FTA, 캐나다, 중국 등으로 이어질 FTA는 어떻게 대응할 것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구축에 대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상북도에서 한국에너지경제연구원에 동해안 에너지클러스터 구축방안 수립에 7억원의 예산으로 발주하였는데, 용역의 연구범위, 연구결과 활용과 용역비의 산정근거, 또한 참여 연구원의 인원, 전공

등과 아울러 도비를 적절하게 사용하였는지에 대하여 답변을 듣고자 합니다.

경북은 전국 에너지의 40~50%를 생산하는 중요한 지역이며 포스코 등 그 소비처가 상당한 비율을 차지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울진과 월성의 원전, 영덕의 풍력, 경주의 방폐장, 양성자 가속기, 한수원 등이 소재해 있거나 유치가 확정된 에너지에 대한 요충지로서 그 중요성을 강조해도 지나치지 않을 것입니다.

경북은 에너지 고갈에 따른 국제에너지 무기화, 산업자원부의 에너지 관련부서 강화 등으로 어느 정도 신성장산업으로서 충분한 환경이 조성되었다고 봅니다.

이러한 배경 하에서 경상북도의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구축방안 수립은 시기적절하며 용역의 결과에 따라 경북지역에 미치는 경제적 파급효과는 엄청나게 클 수밖에 없다고 하겠습니다.

그런데 이 과정에서 용역관련 예산이 적절하게 집행되었는지? 그리고 에너지 전문인력은 어떤 사람들을 채용하였는지? 경북지역의 참여인력은 어떤 전문가가 참여하였는지? 그리고 참여 연구원들의 역할은 전공분야와 부합한지에 대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넷째, 경북테크노파크 중심 추진체계안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경북지역은 타 지역과 달리 2개의 테크노파크가 있으며, 최근 산업자원부에서는 경북은 경북테크노파크를 중심으로 성격이 서로 다른 관련 혁신기관, 즉 센터와 기획단마저도 하나의 재단으로 통합하고자 하고 있습니다.

경북지역의 통합현황은 어떠하며, 기관 간 통합이후 기관 효율성 차원에서의 장점과 단점은 무엇인지, 통합이 전국적 대세라면 통합 후라도 기관의 전문성, 특화분야를 고려하여 고유역할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한 자율성 확보방안은 마련되어 있는지에 대하여 질문을 하겠습니다.

경북테크노파크는 총사업비 815억원을 투자, 1998년 법인화하여 창업보육, 시험생산 등 기업의 직접적 지원업무를 주요 사업내용으로 하고 있습니다.

재단법인 경북테크노파크에서는 테크노파크사업단, 경북전략산업기획단,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로 구성되어 있으나, 각 사업단별로 별도의 예산으로 사업을 추진 중에 있으며, 행정지원의 효율성을 위하여 테크노파크사업단에서 전체적 행정을 통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각 사업단은 별도의 고유목적에 따라 인원을 채용하여 고유목적에 의한 예산을 별도로 집행하고 있으나 경북테크노파크 중심의 원장제 도입 및 강제적 통합에 의한 상호간 고유업무의 영역이 침해되어 사업의 효율성 저하가 우려됩니다.

사업단별 주요업무를 보면 테크노파크사업단은 기업지원,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은 경북중장기발전계획 수립과, 전략산업 기획 및 혁신사업 평가를 맡고 있으며,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에서는 하이브리드 부품관련 기업지원 및 기술지원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 각 사업단별 인력구성은 어떻게 되어 있으며, 서로 다른 성격의 사업단 통합으로 사업의 효율성을 포함하여 발생할 수 있

는 부작용은 없는지, 그리고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의 경우 경북지역 산업관련 총괄기획·조정·평가를 수행하는 핵심 브레인 기관인데 사업수행기관인 타 기관과 통합한다는 것은 인사·행정의 침해에 의해 기획과 평가의 불공정성을 가져올 수 있는 가능성이 높다고 보는데 왜 반드시 통합하여야 하는지, 그리고 통합이 피할 수 없는 상황이라면 기획과 조정, 평가를 독립적으로 수행해야 하는 경북전략산업기획단 기관자체 성격상 반드시 자율성이 보장되는 시스템을 만들어야 한다고 보는데 경북전략산업기획단의 인사·행정에 대한 독립성 보장을 위한 방안을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섯째, 교육비특별회계 예산편성 중 학교운영비 편성에 대한 질문입니다.

학교 기본운영비 편성 목적은 공교육 내실화를 위한 교육재정 역할강화와 단위학교의 자율성과 책무성 제고를 위한 학교회계제도를 도입함으로써 적정규모의 기본운영비 지원을 통한 재정운용의 효율성을 높여 학교의 자율적인 예산운영 및 교육재정을 효과적으로 지원하여 평생학습센터로서의 역할 제고에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편성기준을 정해놓고 적용기준을 한국교육개발원의 표준교육비 산정방식에 따라 편성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표준경비를 학교단위는 53~67%, 학급단위, 학생단위, 교원단위는 54%로 구분하여 적게는 33%, 많게는 47%를 삭감하여 배분하고 있습니다.

농어촌 소규모 학교가 많은 우리 도의 실정에 맞게 학급 단위별,

학교 급별 표준경비 차등 적용으로 학교별 불균형을 최소화한다는 명분 하에 적용기준을 정해놓고 병설(통합)교 및 분교장의 학교단위 경비는 3분의 2 수준으로 편성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렇게 운영하니 학교 통합교에서는 경비 부족으로 교육을 제대로 하지 못해 공교육을 외면하고 사교육에 의존하고 있거나 않은지 심히 우려가 됩니다.

교육은 미래에 대한 투자입니다. 기본교육을 제대로 받지 못하고 상급학교로 진학한다면 경쟁력에 뒤떨어질 수밖에 없습니다. 단위별 표준경비를 100% 지원하여 학부모들이 안심하고 공교육에 맡길 수 있도록 하여 주셨으면 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유아교육비 지원에 대해서입니다.

각 학교에서 운영하는 병설유치원은 유아교육비를 1인당 연간 만5세아 무상교육비로 63만6,000원,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로 44만6,000원, 두 자녀 교육비로 63만6,000원을 지급하는 반면, 사설유치원에는 사학지원비로 만5세아 무상교육비 194만4,000원, 저소득층 만3·4세아 교육비로 164만2,000원, 두 자녀 교육비로 71만8,000원을 보조하고 있는데 사설유치원에 3배 정도 더 지원하는 이유가 무엇인지 답하여 주시기 바라며,

끝으로 교육경비보조금에 대한 질문입니다.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에서는 지방자치단체가 각 학교에 교육비를 보조해줄 수 있다는 조항이 있으나, 하위규정인 시군 및 자치구의 교육경비보조에 관한 규정 제3조제3항에 의하면 당해연도의 일반

회계 세입에 계상된 지방세와 세외수입의 총액으로 당해 소속공무원의 인건비를 충당하지 못할 경우 교육경비의 지원 가능성이 제한되어 있습니다.

이로 인하여 재정자립도가 낮은 영양군과 또 이와 비슷한 군의 경우 지원을 받지 못하는데 이로 인한 도·농간의 교육격차가 점점 벌어지지 않을까 우려됩니다.

본의원은 교육경비보조금 관련 조항을 개정할 필요가 있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보충질문을 드리겠습니다.

경제과학진흥본부장님, 오늘 질문을 하다보니까 또 공교롭게도 3건이 경제과학본부에 관한 것입니다. 이것은 과거도 중요합니까마는, 실제 현재와 미래가 더 중요하기 때문에 앞으로 우리 경북도가 미래에 어떤 방향으로 나갈 것인지 여기에 대해서 우리가 함께 고민하지 않을 수가 없어서 집중적으로 질의하게 되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 첫 번째 질의를 드리겠습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 운영 방안에 대해서 보충질문을 드리고자 합니다.

지역전략산업진흥사업으로 구축이 완료되고, 또 혹은 구축중인 구미전자산업진흥원, 그리고 안동경북바이오산업연구원, 울진의 경북해양바이오연구원에 대해서 우리가 답변을 들었습니다만. 영천의 하이브리드부품기술혁신센터와 포항의 스틸표면가공통합기술센터의 사업진행현황을 계획 대비, 그리고 추진 현황과 하드웨어 구축 정도, 전문인력 확충 정도, 그리고 산자부 평가 정도에 대해서 답변해주시고, 산자부 평가정도가 부진하다면 그 원인과 부진부분에 대해 앞으로 추진계획까지 일괄해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 이제 말씀 중에 공무원들이 관여를 하는 것 같은데 초기단계에

추진주체가 명확하지 않은 관계로 공무원 지원이 필요할 줄 압니다마는 그러나 민간조직의 장점을 극대화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을 조금 배제하는 게 좋지 않나 생각이 됩니다. 현재 두 기관에 각 건축직들 하나씩 보냈다고 하는데, 그 외에 구미라든지 안동, 울진 해양바이오산업 거기에는 현재 파견된 공무원은 없습니까?

- 최대한 자율성이 확보될 수 있도록 공무원 파견을 좀 지양했으면 합니다.
- 세 번째, 동해안에너지클러스터 구축에 대한 보충질문입니다. 한수원에 관한 보도를 며칠 전 영남일보에서 봤습니다. 거기에 보면 울산시가 한국수력원자력 본사가 이전하는 경주시 양북면과 인접한 울산 산하지구에 대규모 거주단지를 건설할 계획으로 되어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한수원 본사 입지를 선정한 후에 우려했던 직원들의 울산거주가 현실화 되지 않을까 우려를 안 해볼 수가 없습니다. 경주 도심에서 한수원 본사가 들어설 양북면 장항리까지 출·퇴근 시간이 45분 정도 소요되는 걸로 되어 있고, 반면 장항리에서 산하지구까지가 25분 정도 걸리는데 여기에 앞으로 직원들이 900여 명의 한수원 직원뿐 아니라 수천 명에 이를 것으로 예상되는 협력업체 직원들이 잘못하면 그쪽에서 생활기틀을 잡을 우려가 있습니다. 이렇게 된다면 이주에 따른 직·간접적 경제과급효과를 우리가 처음에 기대했던 것

과는 전혀 다른 방향으로 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경주시는 방폐장 유치에 따른 지역경제의 반감우려가 클 것으로 보는데, 이에 따른 도청의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방폐장 등의 유치를 통해 가지고 우리가 ‘원전세’라는 명목으로 국가에서 4조2,000억 규모의 예산을 경주시 및 경북도에 배정하는 걸로 되어 있는데, 예산의 활용방안에 대해 가지고 구체적으로 말씀을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 차질 없이 추진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정보에 의하면 원전세에 관한 용역이 이미 진행 중인 것으로 아는데, 이에 대해 가지고 추진상황이 있으면, 그리고 앞으로 향후 계획에 대해서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 답변이 길다 보니까 시간이 초과된 것 같은데, 네 번째 경북테크노파크 추진하고, 그 다음 경북자체 한·미 FTA, 또 교육청에 질의할 것은 서면으로 질의하도록 하겠습니다.

이상으로 도청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 최윤희 의원(통상문화위원회) ◎

한나라당 비례대표 출신 통상문화위원회 최윤희 의원입니다.

어젯밤 비가 내린 뒤라 그런 지 오늘 아침에 도의회를 출근하는 고속도로변은 더욱더 푸르고 맑게 되어서 마치 오늘 저의 도정질문을 응원해주는 것 같았습니다. 그런데 점심식사 이후에 이렇게 하게 되어서 여러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이 저의 도정질문을 자장가로 들으실까봐 조금 걱정이 됩니다.

이번 제215회 임시회에서 도정질문을 하기 위해 준비하는 과정에서 저는 많은 것을 새롭게 배우고 느끼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해야겠다는 것을 스스로 다짐하면서 본의원은 도민을 대표하는 도의원으로서 집행부를 견제하고 감시하는 역할도 하지만 칭찬과 격려도 아끼지 않을 것입니다.

최근 도청에 들어오면서 길가에 나란히 걸려있는 우리 태극기와 어느 외국의 국기가 펄럭이는 것을 자주 보게 됩니다. 그럴 때마다 저는 ‘아 오늘도 우리 경북에 외국손님이 오는구나’하면서 희망 경북을 위해 열심히 일하는 현장에 함께 있다는 것이 자랑스럽고 흐뭇한 마음을 감출 수가 없습니다.

김관용 도지사께서 취임한 지도 어느새 1년이 다 되어갑니다. 그동안 짧다면 무척 짧은 시간임에도 불구하고 지사께서는 공직 내부에 변화의 새바람을 일으키고 도민에게는 새경북발전을 위한 비전을 제시하면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키기 위한 다각적 활동을 경주해왔습니다.

이에 올해 들어 투자유치금액이 1조원을 넘는 등의 희망적이고도 가시적인 성과를 내놓기도 하였습니다. 이 자리를 빌려 그 노고에 진심으로 감사드립니다.

또 본의원이 집행부의 관계사무실을 방문하면 종전의 칙칙하고 어두운 사무실이 아닌 밝고 단정하게 정리된 분위기로 바뀐 것을 보면 도청을 방문하는 많은 민원인들에게 매우 긍정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물론 사무실 분위기와는 달리 우리 경북의 얼굴인 도청입구는 아직도 '60년대의 옛 모습을 그대로 고이 간직하고 있습니다. 아무도 보지 않는 구시대적인 게시판과 수천 명이 복잡한 2차선을 통해 출퇴근하는 모습, 그리고 일부 공무원들이 아직도 타성과 관행에 젖어 있는 모습은 하루빨리 혁신이 정착되어야 함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또한 조병인 교육감께서도 취임한 이후 2006년도 교육청 혁신지수 진단결과에서 전국 최고라는 평가와 교실수업개선 실천사례 연구 발표대회에서도 전국 최고 수준의 실력을 뽐내는 등 지역 인재양성을 위해 최선을 다하는데 심심한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드립니다.

앞으로 더 열심히 그리고 더 잘하여 300만 도민들로부터 신뢰받는 경상북도가 되기 위한 혁신에 더욱 박차를 기할 것을 당부하면서 도정질문에 들어가겠습니다.

첫째, 산업단지의 정주여건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세계적인 기업도시라고 알려져 있는 프랑스의 Sophia Antipolis는 휴양도시에 꽃핀 유럽의 실리콘밸리라 불리며, IBM 등 세계에서 몰려오는 첨단기업들로 지금도 북새통을 이루고 있습니다.

이는 휴양지인지 산업단지인지 분간하기 힘든 공원 같은 산업단지를 조성하여 해당지역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정주여건을 제공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 외에도 미국 노스캐롤라이나주의 RTP(Research Triangle Park), 네덜란드 아인트호벤의 하이테크 캠퍼스 등 전 세계적으로 그 명성을 떨치고 있는 지식기반형 기업도시의 성공사례 등에서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그 중요한 관건은 산학협력의 활성화, 대기업에 의한 지역발전 동력 그리고 지자체의 적극적인 기업지원정책 등을 꼽고 있습니다.

해외의 성공사례에서도 잘 알 수 있는 바와 같이 우리 경북의 첨단 산업이나 대기업 등을 향한 공격적인 투자유치가 성공하기 위해서는 공장부지 매입부터 준공에까지 완벽한 행정서비스 제공이나 산학협력에 의한 고급인력의 지속적인 공급도 매우 중요하지만 그에 못지 않게 중요한 것은 바로 주거, 의료, 교육 등을 포함한 근로자들의 정주여건이라고 할 것입니다.

고학력 연구개발자나 숙련된 고급기술자 등 근로자들에게 최상의 주거환경이 뒷받침되지 않을 경우 아무리 훌륭한 기업을 유치한다 해도 투자여건은 어려워질 수밖에 없을 것입니다.

우리 도는 올해만 해도 안동의 경북바이오산업단지 등 5곳의 산업단지 조성에 박차를 가하고 있으나 이러한 산업단지 조성과 아울러 그에 걸맞은 정주여건 인프라를 확보하기 위한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병행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와 관련한 대책은 무엇인지 설명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본의원은 기존 대단위 산업단지에서 열심히 땀 흘리며 일하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을 개선하는 것도 매우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그 중에서도 구미국가산업단지가 우리나라는 물론 경상북도에서 차지하고 있는 비중이나 중요성에 견주어 그곳에서 산업역군으로 일하고 있는 근로자의 정주여건에 관해서 예를 들어 말씀드리겠습니다.

구미국가산업단지는 우리나라를 IT 강국으로 부상시킨 첨단기술의 집적지로서 지난해에도 전국 무역흑자의 118%를 달성하는 외화획득의 중요한 생산기지로 자리매김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현상의 이면에는 삼성과 LG 등의 산업호황을 비롯하여 60여 곳의 대기업, 그리고 1,700여 곳에 이르는 중소기업들이 753만 평에 이르는 구미국가산업단지에서 수많은 근로자들이 밤낮없이 산업현장에서 적극 활동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이 구미국가산업단지의 경우 지속적인 성장을 위해서는 교육과 문화 인프라 보강 등 쾌적한 정주여건을 조기에 마련하여 주민들의 유출을 막는 것이 최대과제라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이러한 거창한 문제를 논하기 전에 현재 구미국가산업단지에 근무하는 근로자들은 일하러 오면서도 주차장 하나 제대로 없는 실정입니다. 이는 우리가 근로자의 정주여건 문제를 얼마나 가볍게 보고 있는지 잘 볼 수 있는 한 예입니다.

즉, 구미국가산업단지 1, 2, 3단지에는 공영이나 유료 주차장이 거의 없다시피 하여 공단 입주기업들은 도로나 시설녹지 등에 차를 세워두고 있는 실정입니다.

4단지의 경우는 더 더욱 심합니다. 한국수자원공사는 구미 4단지 205만평을 새로 만들면서 조성비용이 추가된다고 하며 법이 정하고 있는 주차공간까지 줄여 최근 논란이 되기도 하였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에서 근로자들이 열심히 일을 할 수 있도록 정주여건을 갖추고 근로자들이 삶의 여유와 문화를 즐길 수 있는 쾌적한 환경을 만들어야 함에도 주차장 문제에서부터 벌써 어긋나고 있음에 어떠한 견해와 대책을 가지고 있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이상과 같이 특정지역에 해당하는 한 가지의 예를 말씀드렸지만 다른 지역의 산업단지 조성도 관련하여서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경북지역에 소재하고 있는 각 산업단지에 입주하고 있는 모든 기업들이 경북의 지역경제를 지탱하는 기둥역할을 하고 있음에도 생산위주의 지원만 이루어지고 근로자의 여가활동이나 문화활동을 지원하는 것은 매우 빈약하기 그지없다면 기업유치가 어려워짐은 물론이고 기존의 기업마저 다른 지역에 빼앗기는 결과를 낳게 될 것으로 이에 대한 대책마련이 시급하다고 보는데 그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산업단지 조성에 따르는 가장 기본적인 근로여건은 물론 공단 근로자를 위한 여가복지시설을 마련하여 주5일 근무 및 수업제 확대, 문화예술을 통한 삶의 질 향상에 대한 기대욕구의 증가 등 체계적인 문화복지서비스를 마련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생각하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구미의 강동지역에는 3개 국가산업단지에서 400여 개 기업체의 6만여 명의 근로자 그리고 10만여 명이 거주하고 있으나 문

화예술 기반시설이 매우 열악하여 문화복지회관 설립이 요구되고 있는 바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둘째, 경북방문의 해와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우리 도는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아 1/4분기에 도내 관광객이 1,162만3,000여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 960여만 명에 비해 20% 이상 늘었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아직 가야할 길이 많으나 그동안 2007 경북방문의 해를 맞이하여 각고의 노력을 해오신 집행부 관계관 여러분에게 그간의 노고에 위로와 격려의 말씀을 먼저 드립니다.

이와 같이 우리가 관광의 중요성을 강조하는 것은 관광을 통해 지역경제를 활성화하고, 일자리를 만들어내는 등 지역발전의 계기를 더욱 앞당기는데 그 의의가 있다고 할 것입니다.

그러나 경북방문의 해를 기점으로 경북관광의 중흥을 이루어내야 하는 시점임에도 불구하고 경북의 관광인프라는 상대적으로 미흡하다는 문제점을 지적할 수 있습니다. 즉, 국내외 관광객이 쉽게 경북을 찾을 수 있도록 동남권 신공항 건설과 동서고속도로의 건설 등도 매우 시급한 일이라 할 것입니다.

또한 관광객의 접근성을 높이기 위한 교통망의 건설과 더불어 숙박시설의 증설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나 경북의 경우 수학여행단을 수용할만한 대규모 숙박시설은 경주를 제외하고는 전무한 상태이니 경북관광은 그저 스쳐지나가는 관광에 머물고 있는 실정입니다. 이를 시정하기 위한 대책이 적극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특히 지난 4월 중순경 한 인터넷 포털사이트 등에 경주 수학여행

부실식단의 사진이 올라 논란이 된 적 있습니다. 물론 일부 식당의 문제이겠지만 인터넷의 특성상 부실식단 사건은 경주의 이미지를 크게 훼손함은 물론 경북관광의 문제점을 그대로 노출하는 것 같아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었습니다.

우리는 이런 문제를 감추기에 급급하기보다는 경북관광문화가 전반적으로 거듭나는 계기로 삼아 국내에서 가장 많은 문화재와 보물, 관광자원을 보유하고 있는 경북 특유의 관광개발에 총력을 기울여야 한다고 생각하는데 지사께서는 어떻게 생각하시는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지역특구 조성사업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경쟁력 있는 지역특화산업을 육성하고 이를 통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려는 지역특화발전특구 제도가 일부 지역에서 차질을 빚고 있으며 오히려 특구제도의 이점을 살리지 못하는 것으로 지적되고 있습니다.

우리 경북의 경우만 하더라도 전국에서 가장 많은 특구가 지정되어 현재 11개 시군에서 14개 특구가 지정 완료되었으며 여기에 추가적으로 10개 시군에 12개의 특구가 추진 중에 있습니다.

그러나 초기에 지정된 일부 특구를 제외하고는 전국적으로 비슷비슷한 특구가 쏟아지면서 특구간의 차별성이 사라져버렸으며 더욱이 규제가 일부 완화되는 것 외에는 정부의 지원책이 전혀 없어 특구를 지정한 의의마저 상실한 상태이기도 합니다.

가령, 한약 및 의료관련특구는 우리 경북에 영천한방진흥특구가 있으나 대구에 약령시한방특구, 익산에 한방의료연구특구 등 전국에

8곳이나 존재하고 있으며, 포도의 경우도 김천에 포도산업특구, 상주에 고냉지신선포도특구, 영동에 포도와인산업 등 4곳이 경쟁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더욱이 청송에서 꿀사과특구, 예천의 애플밸리특구를 추진하고 있어 중복경쟁이 불가피하나 이미 충북충주에 사과특구가 있는 상태에서 특구지정의 의미가 있는지 의문입니다. 게다가 특구지정을 받았으나 관련된 예산지원은 전혀 없어 각 지자체는 사업을 축소하거나 다른 용도의 특별사업비를 특구사업에 전용하는 문제마저 발생하고 있습니다.

지역특화발전특구 지정으로 지역경제를 활성화시킨다는 점은 이해하지만 무분별한 특구 추진과 지정은 환경 파괴, 부동산 문제 등을 낳을 수 있으므로 특구별 특성을 살리려면 자치단체와 정부의 세밀한 준비와 검토가 전제되어야 할 것입니다.

이에 특구지정에서부터 지역특구사업의 취지를 제대로 살릴 수 있도록 특구지정의 요건을 강화하고 지정된 특구에 대해서는 예산과 세제상의 혜택을 부여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입니까?

마지막으로 도 교육감에게 지방교육재정과 관련하여 질문하겠습니다.

현재 지방교육재정교부금법 제11조에서는 공립학교의 설치운영 및 교육환경개선을 위하여 시·도는 매 회계연도마다 일반회계 예산에 계상하여 도세의 3.6%를 교육비특별회계로 전출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교육비특별회계로 진출된 교육재정은 현재 초·중·고등학교의 재정을 확충하는 데만 지원되고 있으며, 유치원에는 전혀 지원되고 있지 않습니다. 이는 저출산고령화시대에 유아교육을 활성화시켜 저출산과 여성취업문제 등을 진전시키려는 흐름에 전면 위배되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법률적으로는 2004년 유아교육법이 제정된 이후 유아교육의 공교육화가 진행되고 있으며 재정적으로도 만 5세 아동에 대해 거의 무상교육이 이루어질 정도로 뒷받침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지방교육재정 확충이 공교육화되고 있는 유치원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 것에 대한 대책마련이 필요하다고 보여지는데 이에 대한 교육감의 견해는 무엇입니까?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의하면 이는 교육감을 비롯한 각 지역의 교육장들의 의지에 달려있는 문제로 향후 재정운영을 담당하는 부서에서 유치원에 대한 예산지원을 반드시 포함하도록 하는 명확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은 도정질문을 통해 집행부의 시책추진 등 문제점에 대해 진솔하게 서로 털어놓고 함께 고민하며 대안을 찾는 계기가 되어 경북발전을 한 단계 앞당기는 장이 되기를 바라면서 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하여 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예, 답변 잘 들었습니다. 지방산업단지 개발에 맞춰 기반시설과 자족기능을 갖춘 생활권으로 거듭나기 위해서는 공단으로 새로 유입되는 인구의 정주여건이 필수적입니다. 지역균형발전 도모 및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서는 공단개발이 진행되는 시점에 주택지 조성 등 균형발전 계획이 함께 이루어져야 함에도 우리는 그동안 상대적으로 우선순위에 두지 않았던 것이 현실입니다. 정주여건 조성대책에 최선을 다하겠다는 답변으로는 부족하다고 생각합니다. 고급 기술 인력에게 매력 있는 도시계획을 만들기 위한 대안활동을 강화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쾌적한 도시계획과 동떨어진 채 술집, 음식점, 여관만으로 가득찬 구미 시가지 모습은 기업에 근무하는 연구원들은 창피하다는 말을 합니다. 이것은 LG필립스 LCD부터 삼성전자 공장까지 구미지역의 산업공단 정주여건을 고려치 않은 개발 일변도의 사고가 빚어낸 결과가 아닌가 생각합니다.

앞으로 새롭게 조성하는 공단에는 적극 현실성 있게, 단기가 아닌 장기적인 계획을 기본으로 하여 추진한다면 재정적인 부담 역시 효율적이지 않은가 저는 그렇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아까 구미 국가공단 4단지 주차장 문제에 관해서 수자원공사로부터 법정면적을 확보하겠다는 공문을 받았다고 답변을 하셨는데 현재 1, 2, 3단지가 주차난을 겪고 있는 이유가 바로 법정면적의 주차장만 조성한 까닭이 아닙니까?

- 이 주차장 관련은 우리 경제과학진흥본부 소관업무가 아닙니까?
- 예, 그런데 원래 주차장은 경제과학진흥본부죠?
(○투자통상본부장 성기룡 집행기관석에서 - 여러 부서로 나눠져 있어 가지고 제가 대표로...)
- 예, 그럼 통상본부장님 앞으로 좀 나와 주십시오.
그래서 법정면적으로만 주차장을 확보할 경우 4단지에도 불 보듯 뻔한 주차
- 본부장님, 한 가지만 더... 그리고 근로자 여가 및 복지시설 설립 지원 답변 중에 지금 포항, 구미, 영주, 영천, 칠곡에 근로자복지회관이 이미 있다고 그렇게 답변을 해주셨습니다. 제가 어젯밤 늦게까지 이 지역의 홈페이지를 다 들어가 봐서 인구와 고용인원, 입주업체, 인구대비 근로자 퍼센티지, 이런 것을 제가 파악을 했습니다.
포항은 50만명이 약간 넘는 인구에 현재 고용인원이 2만2,000명입니다. 인구대비 근로자 프로테이지가 4.4%로고요. 구미는 38만6,000명에서 인구대비 근로자수는 프로테이지가 24.4%입니다. 그리고 영주, 영천, 칠곡 여기에도 역시 근로자복지회관이 있다고 말씀하셨는데 여기에는 인구대비 근로자가 각각 1.7%, 5.3%, 칠곡이 그 중에서 가장 높습니다, 9.5%입니다.
그런데 대부분 지금 여기에서 말하는 영주, 영천, 칠곡에 말하는 근로자들은 아주 영세업자들이라고요. 제가 홈페이지를 보니까 대부분 고용인원이 5명에서 10여 명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각 지역의 근로자복지회관의 현황을 살펴보면, 근로자

복지회관이라고 그래도 불려지는 곳은 구미밖에 없었습니다. 그것도 시민복지회관 내에 있습니다. 대부분이 보면 청소년, 여성, 노인 이렇게 같이 지금 운영이 되고 있는데, 현재 근로자복지회관이 운영되고 있는 지역의 인구대비 근로자 프로테이지를 보면 구미와 칠곡을 제외한 모두가 5% 미만으로 막대한 예산을 들여 곳곳에 마을회관, 경로당, 청소년회관, 여성회관, 노인복지회관, 장애인복지회관, 근로자복지회관 등 각각 따로 만드는 것은 결코 바람직하지 않다고 저는 생각합니다.

모두가 함께 더불어 사는 사회를 조성하기 위해서라도, 그리고 공간 활용을 더욱더 효율적으로 하기 위해서는 우리도 선진국과 같이 커뮤니티센터, 즉 노인, 청소년, 여성, 장애인 모두가 함께 어울어져서 다양한 취미활동을 즐기는 곳으로 말 그대로 주민 모두가 사용하도록 하는 공간으로 만들 의향은 없으신지요?

- 우리 본부장님 지금 오신 지 얼마 되지 않아서 그런지 솔직히 제가 좀 속이 시원한 그런 답변이 안 나오네요.
- 그러면 제가 이런 문제를 제기를 했으니까 좀더 적극적으로 검토해서 앞으로, 특히 지금 이 부분은 저하고 같은 상임위원회 소관 업무죠? 그렇죠?
- 문화체육관광국장님 경북방문의해와 관련하여 관광객의 취향과 일정에 맞게 다양한 볼거리와 먹을거리, 특산품 개발에 최선을 다하고 있다고 답하셨는데 아직까지 우리 경북 곳곳의 관광지로

가면 먹을거리와 특산품은 거의 동일한 실정입니다. 각 관광지역 별 그 지역 특유의 전통과 멋을 살리는 상품을 개발하는 것이 본 의원은 시급하다고 생각합니다.

한 예를 들면, 작년 전국체전 때 미국선수단과 임원을 만나서 이야기를 해보니 그 분들의 이야기가 돈 쓸 일이 없다, 선물 살 것이 하나도 없다라며 불평을 하셨습니다. 김천에서 전국체전을 개최하였지만 김천방문을 기념하는 김천이라고 쓰인 티셔츠 하나도 구입할 수가 없다 하면서 아쉬워 하셨습니다. 외국의 경우는 뉴욕이라고 쓰인 티셔츠는 뉴욕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고 파리의 에펠탑 모형은 파리에서만 구입할 수가 있습니다.

앞으로 경북을 찾아오는 외국인들의 욕구와 눈높이에 맞는 상품을 개발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국장님,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언제까지 연구하시겠습니까?

- 오늘 이 자리에서 제가 공식화했으니까 우리 관계기관 부서에서 적극적으로 진짜 그 일을 추진해주시기를 당부드립니다.
이상 추가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고우현 의원(건설소방위원회) ◎

존경하는 방대선 부의장님을 비롯한 선배·동료의원님 여러분!
그리고 도민의 복리증진과 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 애쓰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관계공무원 여러분, 인재양성에 노심초사 하시는
조병인 교육감님과 교육청 관계공무원 여러분!

문경 출신 건설소방위원회 고우현 의원입니다.

최근 한·미 FTA, 경기침체, 고령화, 저출산 문제 등 어려운 여건
속에서 지역균형발전과 일자리 창출 등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하여
도민의 욕구가 무엇인지 연구하며 공부하는 의정활동 혁신을 위하여
도정질문의 기회를 갖게 된 데에 대하여 무거운 책임감을 느낍니다.

본의원은 평소 의정활동을 수행하면서 관심을 가져왔던 도정
분야에 대해 질문코자 하니 성실하게 답변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첫째, 도 산하 출자기관의 효율적인 운영방안과 대책 등에 대하여
지사님께 질문을 하겠습니다.

현재 경상북도에서 출자를 하여 설립 운영중인 출자기관, 지방
공기업 등은 경북통상, 경북개발공사 등 29개 정도로 파악하고 있
습니다. 이들 기관들의 기관장 연봉이 최저 6,000만원대에서 1억
6,000만원까지로 대부분 6,000~8,000만원대이며, 근무 중인 직원
수도 최저 10명에서 최고 192명 정도로 알고 있습니다.

최근 한국자치경영평가원에서 경북운수연수원 등 17개 기관에
대해 2006년도 경영평가한 결과보고서를 보면 최우수등급인 ‘가’급

은 경북장애인종합복지관, 여성정책개발원,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 등 3개 기관이고, 경영성과가 미흡한 최하위 등급인 ‘라’급은 운수연수원과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 2개 기관입니다.

경영개선 노력이 요구되는 ‘다’급은 생활체육협의회, 문화엑스포, 해양바이오산업 연구원, 국학진흥원, 경북학숙, 경북체육회 등 6개 기관으로 평가결과가 나왔습니다.

이들 기관별 주요 문제점과 지적사항을 살펴보면 운수연수원의 경우 이사회 운영의 이원화, 원장 직급 과다로 고임금, 상대적으로 높은 직원 인건비 등이 지적되었으며, 중소기업종합지원센터는 이사회 구성인원 과다, 인건비 지원체계 다원화, 중장기 자립기반 강화노력 부족 등이며, 청소년수련관은 이사회 구성인원 과다, 전문 관리자 부재, 인력 특별채용 등이고, 장애인복지단체협의회는 이사회 구성편성 폐쇄성, 보수규정 미제정 등입니다.

경북체육회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의 업무중복으로 사무차장제 폐지, 전문인 채용 필요, 과다한 인건비 및 퇴직금 등 기관별로 종합 경영, 조직, 인사, 보수, 예산, 회계, 사업운영, 고객만족 등 항목별로 문제점과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는데, 그중 전체기관 종합경영달성도가 54.8%로 가장 낮은 수준입니다.

지사께서는 이들 17개 기관별로 지적된 사항에 대해 앞으로 조치 계획이나 대책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기관장, 임원 등 임용에 있어 경영평가결과보고서에서 공통된 사항으로 지적한 바와 같이 이들 출자 기관들도 기업 차원에서 주민들에 대한 서비스 개선이나 경영성과를 올릴 수 있는 사람이

책임자로 임명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이 됩니다.

각 기관별로 기관장 등 임용에 있어 퇴직공직자나 선거캠프 출신, 정치인보다는 경험과 학식이 풍부한 관련 전문가를 공개경쟁 채용함이 원칙이라고 생각하고 있습니다.

다만 도청 조직활성화와 직원 사기진작 및 도와 원활한 업무협조를 위해서라면 전문직종이 같은 출자기관이나 단순 관리기능만을 주로 하는 기관장 등에 대해서는 정년 퇴직자가 아닌 정년을 몇 년 앞둔 행정경험이 풍부한 유능한 공직자중에서 임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서서는 도에서 출자한 산하 29개 기관장이나 임원 중에서 기관별 특성에 적합한 자질과 소양을 갖춘 전문경영인 출신은 몇 명이고, 공직자 출신과 정치인·언론인 출신은 몇 명인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도 산하 출자·보조기관 및 공기업의 기관장 임용에 있어 어떤 원칙과 소신을 갖고 임명하실 생각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또 이들 기관들의 경영에 대한 효과적임 감시, 견제장치는 있는지, 있다면 무엇이 있는지 답변해주시고, 앞으로 경영진단을 실시하여 부실 기관에 대해서는 임직원 교체, 감봉, 성과중심 보수체계 운영 등을 실시하되, 개선의 여지가 없는 경우 민영화나 퇴출시킬 의향은 있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에는 이들 29개 기관에 운영비 등으로 도에서 연간 수 백 억원이 지원되는 것으로 추정합니다. 2006년도 기준으로 도비 지원액은 전체 얼마이며 또 기관별로 국·도비 운영비 지원 없

이 스스로 자립운영이 가능한 기관은 어느 곳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만일 향후 경영개선 효과가 미흡한 기관은 임금이나 운영비 감액 등 특단의 조치를 취하실 의향은 있으신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 및 문경 국군체육부대 유치와 관련한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한 추진방안에 대한 질문입니다.

경북 북부지역의 11개 시군의 면적이 1만779km²로서 도전체 면적의 56.6%를 차지하고 있으며 인구도 한때 183만 정도가 거주하였으나 도시화가 가속되면서 급격하게 줄어들어 현재는 절반도 안 되는 78만명에 불과하며, 지금도 시군별로 매년 1,000~2,000명씩 줄고 있는 실정입니다.

특히 고령화가 가속화되어 이대로 방치할 경우 앞으로 20~30년 후가 되면 사람이 살지 않는 무인지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낙후된 북부지역 균형개발을 위해 문경, 예천, 봉화의 소백산주변 개발촉진지구 영주, 영양의 산악휴양형 개발촉진지구 등 5개 개발촉진지구를 지정하고, 128개 사업에 사업비 3조7,665억원의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중에 있으나 사업 타당성 여부나 구체적인 자원조달 방안도 없어 무리하게 사업계획을 수립 추진함으로써 2006년도 말 현재 96개 사업에 7,447억원만 투자되어 전체 사업진도가 20%로서 그 실적이 미미한 상황입니다.

특히 문경시의 경우에는 강설량 등 입지여건 부적합과 민자유치

어려움 등으로 2개소의 스키장사업과 진남교반 위락단지 조성사업을 폐지한 바와 같이 계획만 거창하고 결실이 미미한 사례라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고 있는 낙동강 프로젝트 사업은 낙후된 북부지역 개발에 견인차 역할을 다할 수 있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습니다.

앞으로 지사께서는 낙후된 북부지역의 장기발전을 위해 어떤 구상을 하고 계시며, 어떤 대책을 갖고 무슨 사업을 추진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이 정책대안을 제시하겠습니다.

낙후된 북부지역의 균형발전을 위해서는 가칭 지역균형개발조례 또는 오지개발특별조례를 제정하고, 북부지역균형개발위원회를 설치하여 중앙정부와 북부지역 11개 시·군의 각종 정책사업을 일정 수준까지 지역개발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는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또한 지난 3월 28일 경북북부지역 혁신연구원과 경북지역혁신연구원이 주최한 “경북 북부지역 발전전략 모색을 위한 대토론회”에서 “북부권개발청 설립, 획기적 교통인프라 투자, 산업기반 확충, 교육에 대한 투자 및 인구유입책” 등 발전 방안을 제시하고, 북부지역은 백두대간 및 낙동강 상류지역 관련 규제 등 90여 개에 달하는 과도한 규제를 적용 받고 있으므로 특별구역으로 지정하여 탄력적인 법 적용이 필요하다고 안을 제시한 바가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북부지역 개발을 위한 청사진이나 개발규제 완화 등을

위해 특별한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북부지역 시 중에서 가장 낙후된 문경시의 경우 1974년경 인구가 최대 16만명 정도였으나 현재는 7만9,000명으로 감소되었고, 재정자립도도 16.4%로서 경북도의 시 평균 28.7%의 절반 정도로서 석탄산업 합리화 이후 매년 지역경제가 위축되고 있으며, 현재 내세울 만한 중소기업이나 대기업 및 국가공단이나 지방공단은 하나도 없는 실정입니다.

반면에 문경과 같은 폐광지역인 강원도 태백시의 경우 태백시 황지동에 145만2,000평의 부지에 민자 등 4,424억2,500만원의 사업비를 투자하여 스키장, 골프장, 숙박시설 등 “서학레저단지”를 2004년부터 2012년 준공 목표로 현재 공사 중에 있습니다.

이와 별도로 강원랜드 2단계 사업으로 150여 만평에 2007년 하반기부터 2015년까지 6,300억원을 들여 게임콘텐츠 개발시설 등을 추진 중으로 문경시와 상반된 현상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잘 아시다시피 이번에 다행히도 지난 4월 11일 국방부에서 1년 동안 끌어온 서울 송파지구에 위치하고 있는 국군체육부대 이전지로 문경시를 확정 발표하였습니다.

문경 국군체육부대 시설이 2010년경 완공되면 2011년 대구세계 육상선수권대회와 더불어 대구·경북이 체육중흥의 전기를 맞이하게 될 것으로 판단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유치에 많은 노력을 기울여 온 경상북도와 도체육회 관계관 여러분에게 감사드립니다.

문경시에 조성하게 될 국군체육부대는 45만평 규모에 25개 종목의

축구장, 수영장, 야구장 등 최신식 시설에 국가대표 중심으로 구성된 우수 경기력을 자랑하고 있습니다. 세계군인체육대회를 비롯한 국내외 대회가 유치되고, 해외 우수팀의 전지 훈련지로도 활용되면 국군체육부대 완공시까지 대구세계육상대회 개최 시기와 비슷하여 대구·경북 체육스포츠와 마케팅을 통해 동반 상승할 수 있는 절호의 기회라고 보고 있습니다.

이번에 경상북도가 경비 일부를 부담하여 기반조성사업, 추가 경기장 건설 및 숙박시설 등 부대시설 조성을 통한 각종 대회를 유치한다면 문경지역 발전에 상당한 시너지 효과를 거둘 수 있다고 보는데 지사께서는 이에 대한 계획은 있는지, 계획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주5일제를 맞이하여 수려한 자연자원과 우수한 전통문화를 갖고 있는 문경을 포함한 북부지역에 접근성을 높이고 기반시설 확충을 위해 현재 장기계획 중이거나 추진중인 여주~충주~문경간 중부내륙 철도 부설 - 95.8km 장기계획 1조1,659억원, 문경~봉화~울진간 동서5축 고속도로 건설 - 150km 장기계획 2조9,920억원, 문경읍 고요리에서 산북면 석봉리에 있는 단선터널 공사 5km에 2015년 이후 350억원, 문경시 신기·유곡동의 신기지방산업단지 확장 3만8,000평에서 8만8,000평으로 확장, 호계~불정간 국도4차선 확장 계획중 - 10.2km 1,782억원 등 대단위 SOC사업이 금년말 대선공약에 포함되어 정부 주관으로 적극 추진될 수 있도록 지사님의 정치적 노력이 그 어느 때보다 필요하다고 본의원은 생각하고 있는데, 이에 대한 지사께서 대책과 추진 방향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에 대하여 질문하겠습니다.

지사께서는 2006년 7월 취임후 도와 시·군간 합리적인 인사교류 방안을 마련하기 위하여 도와 시·군간 인사교류협의회를 구성하고 몇 차례 회의를 개최하는 등 그간 많은 노력을 하고 있는 걸로 알고 있습니다.

본의원이 판단하기로는 현재 도 출신이 시·군에서 근무중인 5급 이상을 살펴보면 부단체장 23명과 4급 7명, 5급 67명 등 모두 97명으로서 시·군 5급 이상 1,038명 중 도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은 9.3%로서 시·군당 평균 4.2명입니다.

시·군별 현황을 보면 최소 2명, 최대 9명이 근무 중이며, 시·군별로 사무관 이상 중에서 도 출신이 차지하고 있는 비율도 최저 5.1%에서 최대 14.3%에 이르는 등 시·군간 편차가 많은 실정입니다. 또 시·군에 근무중인 도출신 사무관들의 도 전입 시점도 원칙이나 기준이 없이 인사 당시의 상황에 따라 편의적으로 이루어지고 있어 원거리 시·군에 진출하여 장기간 근무중인 도 출신 사무관들의 경우 불만이 많은 실정입니다.

시·군 직장협의회를 비롯한 시·군 직원들의 시·군간 형평성에 맞도록 인사기준을 수립하여 인사교류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강력히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본의원은 알고 있습니다.

지사께서는 일자리 창출을 위해 도와 시·군이 서로 상생하면서 상호 협력하여 매진해야 할 이 상황에서 이 문제를 계속 그대로 방치할 생각이신지, 아니면 취임 1주년이 되어 가는 이 시점에서 앞으로 도와 시·군간에 원활하게 인사교류를 할 수 있는 합리적인

인사교류 기준을 마련할 방안이나 대책이 있는지 답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본위원의 생각으로는 도와 시·군간의 인사교류도 중요하지만 도와 중앙부처 간에도 원활한 인사교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지사께서는 도와 중앙부처간 인사교류 현황과 앞으로 추진계획이나 대책이 있다면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최근 울산시에서 시작되어 전국적으로 확산되고 있는 무능 공직자 퇴출제도에 대해 어떤 복안을 갖고 계시는지 함께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어서 교육감님께 부모 없이 조부모와 생활하는 초등학생의 대책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도내 초등학생중 부모가 안 계시거나 이혼 등으로 인하여 조부모와 거주하면서 재학중인 학생수는 3,826명으로서 총 학생수 190만8,565명의 0.2% 정도입니다. 또 이 학생들에게는 중식비 4억 3,016만1,000원으로 1개월 평균 1만2,492원 정도 지원하고 있으며, 그 외에도 교육청별 실정에 따라 PC, 통신비, 우유, 학습준비물 등을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 학생들은 부모 대신 조부모와 같이 생활함으로써 부모의 사랑과 정에 굶주려 있으며, 또 경제적 사정이 좋지 않을 경우 방과후 특기 학습 등이 어려운 상황입니다.

문제는 나중에 조부모가 돌아가시면 애들만 남게 되어 주위에서 그대로 방치하면 잘못된 길로 들어가기 쉬운 취약한 입장이므로

담임 선생님을 비롯하여 학교에서 특별한 관심과 지도편달이 절실히 필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께서는 소년·소녀가정을 비롯한 조부모와 생활하는 학생들에게 지원하고 있는 중식비와 기타 경비를 상향 지원해주고, 어릴 때부터 올바른 인성교육과 가치관 정립을 위해 특별한 관심과 지도가 필요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구체적인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초등학생 위장 전·출입 문제에 대해 질문하겠습니다.

최근 5년간 고령, 영천, 성주, 군위, 경산, 청도, 칠곡 등 대구인근 7개 시·군에서 대구시로 전출한 초등학생이 1,343명이고, 전입은 756명으로서 더 나은 교육여건과 상위권 대학에 진학할 수 있다는 막연한 기대감이나 직장 등으로 자녀를 둔 부모들이 대도시로 전출 등 거주지를 이동하거나 위장전입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 것으로 파악하고 있습니다.

또 경북도내에서는 대구시 인근 구미시, 경산시, 칠곡군 등의 지역은 최근 5년간 인구가 계속 증가 추세에 있으나 나머지 지역은 감소 추세로서, 도내 시·군간 또는 읍·면·동에서 농촌 지역에 있는 학생들을 시내 지역에 있는 학교로 취학시키고, 같은 지역에서 더 나은 학교로 취학시키기 위하여 주민등록을 허위 신고하는 사례가 많은 것으로 생각이 됩니다.

교육감님께서 왜 이런 현상이 일어나고 있다고 보십니까? 학부모들의 좋은 학교에 대한 잘못된 편견으로 위장전입이 급증하고

있으며, 이러한 현상은 교육의 균형발전을 저해하고 있으며, 지역 사회에서 구심점 역할을 하고 있는 학교의 역할을 격하시키는 결과를 초래할 뿐만 아니라 더 나아가 지역의 교육 발전에도 악영향을 미치고 인구의 이탈을 가져와 중소도시의 붕괴를 우려해야 할 실정입니다.

이와 같은 위장전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특정학교 쏠림 현상에 대한 근본적인 원인을 파악하고 소규모 학교의 행정 및 재정적 지원 방안은 물론, 초등학교간, 중등학교간, 고등학교간 실력의 상향 평준화가 이루어져야 하겠습니다.

무엇보다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행정기관, 교육청, 학부모, 학교운영위원회 등이 앞장서 위장전입 방지를 위해 대책과 아울러 농촌 지역의 의무교육에 대한 교육의 질 향상을 위해 대책이 강구되어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교육감님께서는 이에 대한 대책이나 추진 방안이 있다면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셋째, 결혼이민자 가정 자녀교육에 대한 질문을 하겠습니다.

최근에 국제결혼이 날로 증가하고 있는 상황에서 한국남성과 아시아권 출신 여성의 국제결혼으로 중국, 베트남, 필리핀, 몽골 출신의 많은 이민여성들이 우리 한국에서 가정을 꾸리고 있습니다. 2007년 3월 27일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농촌총각 10명 중 4명이 베트남이나 필리핀 등 동남아시아 여성을 배우자로 맡고 있으며, 우리 경북도의 경우 2006년 5월 현재 결혼이주 여성 2,417명, 국제결혼 가정 자녀수

2,408명이 거주하고 있습니다.

특히 이들 자녀들은 비록 피부색깔과 생김새는 다르지만 분명한 한국인임에도 불구하고 학교에서 아이들의 놀림이 되거나 학습에 흥미를 가지지 못하고 소외당하는 경우가 많아 어린 마음에 치유하기 어려운 상처를 지금도 남기고 있습니다.

본의원은 결혼이민자 가정의 자녀들에 대한 교육프로그램이 관련 기관과의 협의 하에 체계적으로 마련되고 시행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하는데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한 전반적인 대책이나 추진 방침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도정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간단히 하겠습니다.

본부장님 잠깐, 제가 좀 몇 가지 물어보겠습니다.

출자기관의 경영평가를 손수 하셨는데, 산하 29개 기관 중에서 유독 17개만 하셨어요?

○ 앞으로 다른 기관도 하실 용의 있습니까?

○ 그렇습니까?

그 17개 기관 중에서 평가하신 분을 보니까 회계사도 계시고, 교수도 있고 전문위원도 있더라고요. 보니까 한국자치경영평가원이 서울에 있더라고요? 서울에 있는 것 맞죠?

○ 서울에 있는데...

한 사람이 한 기관씩 했어요. 그러면 한 사람이 한 기관 했으면 그 사람이 보는 잣대에 따라가지고 이게 잘되고 못되고 판단할 수 있는 그런 영향도 좀 있죠?

○ 그래서 본의원의 생각에는 문제가 좀 있다고 판단하고 있거든요. 54.8%가 나왔으니까 100점 만점에 점수가 절반 조금 넘었어요. 거의 50%던데...

본의원 생각에는 한 사람이 할 것이 아니라 우리 도에 막강한 감사팀도 있고 또 의회 의원님도 실력이 좋으신 분도 계시고, 합동으로 다시 한 번 더 경영평가를 하실 용의는 없습니까?

○ 본부장님도 지금 바쁘신 걸로 알고 있는데, 간단히 할 것인지 안할 것인지만 말씀하십시오.

○ 또 검토입니까?

(웃음소리)

한다, 안한다만 하십시오.

○ “검토, 고려” 그런 말씀 여기서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도의원 한 10개월 만에 “검토, 고려”, “연구하겠다”... 다 그렇게 들었지요?

(「예」하는 의원 있음)

들었는데... 하시죠?

○ 고맙습니다.

그리고 임원 중에 보면 아까도 말씀하셨다시피 18명이 전문가이고 9명이 퇴직공무원이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본의원이 생각할 때는 도에도 보면 인사적체가 되어 있죠? 도 공무원 중에도 서기관급 이상이 인사적체가 많이 된 걸로 알고 있는데, 이 인원을 정년 퇴직하고 난 뒤에 공로로 거기에 취직시키지 말고 3~4년 전에 “그쪽으로 좀 가 계십시오” 하고, “일 좀 해주십시오”하고 부탁을 드리면 도의 인사 적체도 해소되고, 또 기존에 계시는 공무원들도 사기양양이 될 것 같은데, 본부장님께서서는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지사님도 여기 계시는데, 한번 물어보십시오, 지사님도 그렇게 하시려는지?

(웃음소리)

○ 왜 본의원이 묻는가 하면, 500억입니다, 496억인가 그렇게 기억이 나는데... 500억입니다. 500억에 24개 기관에 돈을 줬다, 적은 데는 좀 적게 주겠지요? 그러면 우리 도의 재정에서 보면 상당한 금액입니다. 그래서 인사나 모든 것은 도에서 좀 관여할 의무도 좀 있다고

보거든요?

- 다음 인사에 대해서 좀 묻겠습니다.

답변을 아까 상세하게 해 주셨는데, 다른 것은 안 묻고요, 여기에 보니까 5급 이상 도에서 시·군에 파견되신 분이 97명인데, 이름은 안 대겠습니다. 어떤 시·군에 적은 데는 5.1%, 그 다음에 5.2%, 6%, 6.3%, 6.5%... 조금 나쁘게 이야기해서 옛날에 낫발 좋은 데는 적게 보냈고, 또 여기 보면 많은 데는 14.3%, 그리고 13.8%, 13.3%, 12.8%, 12.9% 등등 이렇게 보냈는데,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이거 불공평하지 않습니까?

- 아니, 그러니까 지금 시간 없습니다, 없으니까...

- 그런데 불공정입니까, 불공정 아닙니까? 그것만 좀 묻겠습니다. 불공정 맞죠?

- 아니, 참... 불공평하지요. 어떤 데는 적게 가고 어떤 데는 많이 갔는데, 그게 공평하지 않잖아요? 맞잖아요?

- 아니, 그러니까 시정은 하고 있는 것은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불공평하죠? 맞죠?

- 예, 알겠습니다. 싸움할 일도 없고... 됐습니다. 됐고요.

이거 좀 공정하게 언제쯤 하시렵니까?

- 예, 고맙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본의원은 출자기관과 그 다음에 인사에 대해서만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리고 교육청에도 질문할 게 좀 있습니다만 다음에 질의를 할 수 있는 기회가 있을는지 모르겠습니다만 그때 다시 하기로 하고 본의원이 볼 때는 미진한 점이 많습니다. 계속해서 지켜 볼 것

입니다. 경영의 효율성과 능률을 높이는 데 전심전력 다해주시기를 바라고, 또 행정이 공개행정으로 흘러가야 된다고 본의원은 보고 있습니다. 경영이나 인사나 어두운 면이나 사각지대가 있다고 본의원은 판단하고 언제나 행정이 낙후된 것을 알 수 있습니다. 도민들이 지켜보고 있습니다. 이제는 달라져야 됩니다. 이상으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2007년 5월 18일(금) 제215회(임사회) 제2차 본회의

◎ 박진현 의원(기획경제위원회) ◎

영덕군출신 기획경제위원회 박진현 의원입니다.

존경하는 이상천 의장님과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그리고 민선 자치 4기 개막이래 ‘새벽을 여는 경북, 일자리가 있는 경북’이라는 슬로건(Slogan) 아래 7만개 일자리 창출을 위해 역동적으로 도정을 추진해나가고 계시는 김관용 지사님과 ‘함께하는 전인교육 실현’을 통해 경북의 인재양성에 열과 성을 다하고 계시는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먼저 본 의원에게 제215회 임시회 본회의에서 도정질문의 기회를 주신데 대해 깊이 감사드립니다.

먼저 경상북도지사께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지난 해 11월부터 심각한 사회문제로 대두되었던 대게 조업 분쟁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이미 여러 차례 언론에 보도된 바와 같이 울진, 영덕, 포항, 경주 등 동해안 지역에서 대게조업과 관련한 문제가 발생한 원인은 그동안 수심 700미터 이상되는 깊은 바다에 서식하는 홍게를 잡았던 홍게 통발 어선들이 지난해 10월부터 대게가 서식하는 연안까지 들어와 조업을 하면서부터입니다.

지난해부터 올해 초까지 이어진 대게사태의 기폭제가 된 것은 지난 해 11월 24일 근해통발어선에 대해 30톤의 대게 TAC 물량이 할당 되면서부터입니다.

그 경위를 좀더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당초 지난 해 11월 1일에 근해 대게 TAC 어선 조사를 바탕으로 울진군에 88톤의 물량 배정을 통보했던 경북도가 11월 15일 근해통발협회의 요청을 받은 울진군이 11월 23일에 근해통발어선 10척 30톤의 TAC 물량이 포함된 88톤을 요청을 하자 이를 그대로 해양수산부에 배정요청을 했던 것입니다.

결과적으로 경상북도와 해양수산부가 근해통발어선에 대해 합법적으로 연안에서 대게를 잡을 수 있도록 TAC 물량을 배정함으로써 불난 집에 기름을 붙는 일이 발생했던 것입니다.

처음 대게자망어민들이 근해통발어선에 대한 대게 TAC 할당에 대해 항의를 했을 때 경상북도는 TAC 할당은 해양수산부가 결정한 사항이므로 경상북도의 책임이 없다고 했습니다.

그러다가 자망 어민들의 집단행동 등 반발이 거세지자 그때서야 부랴부랴 해양수산부에 근해통발어선에 대한 TAC 할당 시정을 요구하는 어처구니없는 행태를 보였습니다.

도대체 경상북도가 울진군의 신청을 받아 해양수산부에 TAC 물량배정을 신청할 때는 언제이고 문제가 되니까 다시 물량 변경을 요청한다는 것이 말이나 되는 애깁니까? 과연 이렇고도 경상북도는 책임이 없는 것처럼 말할 수 있습니까?

그동안 자망어민들은 조업방식도 훨씬 불편하고 어획량도 적지만 대게 자원 보전이라는 대의를 위해 피해를 감수해왔습니다. 뿐만 아니라 6월부터 10월까지의 대게 금어기를 자율적으로 1달 더 연장해 12월부터 조업에 나서면서까지 대게 자원 보전을 위해 노력해왔다는 것은 이미 잘 알려진 사실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어업자원 관리의 책임을 맡고 있는 경북도 수산 당국이 이런 조치를 취할 수 있습니까? 과연 이렇고도 경상북도가 수산자원 보존과 어민들의 생계를 위해 노력하고 있다고 말할 수 있습니까?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지사께서는 홍계 통발어선에 대한 대계 TAC 물량 배정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담당 부서로부터 어떤 보고를 받았는지 답변해 주시기 바랍니다.

특히 지난해 11월 23일에 해양수산부에 대계 TAC 승인을 요청했던 수산진흥과가 열흘도 안 되어서 12월 2일자로 다시 해양수산부에 공문을 보내 TAC 할당 승인 유보 요청을 한 것에 대해 어떻게 보고를 받고 어떤 조치를 취했는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TAC 물량배정 이후 폭발된 대계 조업 관련 사태를 처리하는 과정에서 나타난 문제점에 대해 지적하겠습니다.

지난 해 12월 5일자로 경상북도가 울진군에 발송한 2007년도 대계 TAC 할당승인 추가 통보 공문을 보면 “우리 도에서 업종간 분쟁 해소를 위하여 해양수산부에 유보 요청을 하였으나 해양수산부장관으로부터 이미 어업자별로 2007년도 대계 TAC 할당량이 승인된 사항이므로 그 내용의 일부를 변경하고자 할 경우에는 먼저 관련 어업자단체와의 협의를 거쳐 변경의 필요성과 변경승인시 예상되는 문제점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이에 대한 향후 대책을 수립한

후 그 내용을 포함하여 변경승인 신청 지시가 있으니 착오 없으시기 바라며”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공문의 내용이 일상적인 TAC 배정과정에서 울진군에 발송한 내용이라면 몰라도 통발어선에 대한 TAC 물량 배정 이후 자망 어민들이 울진군청과 경북도청, 해양수산부 등을 방문하는 등 강력한 항의가 진행되고 있는 상황 속에서 어떻게 이처럼 안이하고 무책임한 대처를 할 수 있는지 납득이 되지 않습니다.

해양수산부의 공문을 받은 다음날 아무런 조치 없이 그대로 울진군에 전달했다는 것은 경상북도 수산당국이 지자체와 해양수산부의 공문 배달만 담당하고 있는 것을 스스로 드러낸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수산업법 제54조 조업수역 등의 조정 제3항을 보면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도지사는 수산업법에 따른 조업수역의 제한이나 조건에도 불구하고 조업수역, 조업기간, 조업척수 및 조건 등을 정하여 그 조업을 허용하거나 제한할 수 있다」고 되어 있습니다.

이번 사태와 같이 영덕군과 울진군, 포항시 등 도내 1개 이상의 지역에 걸쳐 광범위한 영향을 주는 중요한 문제가 발생했을 경우 적극적으로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하는 것이 도의 역할이라고 생각되는데 과연 대계 조업 문제 발생 이후 경상북도가 어떤 조치들을 취했고, 이런 조치들이 경상북도의 역할에 맞는 적절한 조치였다고 생각하는지에 대해 지사님의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우여곡절 끝에 올해 2월 2일 경북지역 연안자망협회와 근해통발협회가 조업구역과 조업방식에 대한 합의를 도출함으로써 현재 대게 조업과 관련된 문제는 일단 수면 밑으로 가라앉아 있는 상태입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합의문에 명시된 내용들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고 후속 조치들이 제대로 취해지지 않을 경우 이 문제는 언제 다시 폭발할지 모르는 매우 위험한 상황에 있다는 것입니다.

합의 이후 3개월이 지났지만 벌써부터 근해 통발어선들의 늦장 어구 철망으로 인해 연안 어선들의 민원이 빗발치고 있고, 어구 사용량을 6틀로 제한한 것 역시 명확한 검수가 이뤄지지 않는 등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연안 통발어선도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포획하겠다고 나서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게 되자 대게 자망어선들조차 이럴 바에는 통발을 이용해 대게를 잡겠다는 얘기가 나오고 있습니다.

만약 이런 상황들을 그대로 방치한다면 대게 어장의 자원 고갈로 인해 경북 지역 어민들의 주요 소득원인 대게 조업이 불가능해지는 것은 물론이고 매년 4월이면 전국에서 수십만 명의 관광객들을 유치했던 영덕과 울진의 대게축제 역시 사라지게 될 것입니다.

2월 합의 이후 대게 분쟁이 잠시 소강상태에 있다고 해서 방심할 것이 아니라 경북도가 지금보다 훨씬 적극적으로 근본적인 문제 해결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먼저 지사님께서서는 경상북도가 주관이 되어 근해통발협회와 연안자망, 연안 시·군, 동해수산연구소가 참여하여 실시하기로 한

‘자망과 통발 이용 시험조업’ 계획에 대한 구체적인 시행시기를 분명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더 중요한 것은 시험조업 결과에 따른 강제 조정이 반드시 시행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지사님께서도 시험조업 결과에 따른 어업간 수심, 어구제한, 출어 횟수 등 강제 조정은 어떤 원칙과 기준으로 언제부터 시행할 것인지도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지난해 12월 15일 개정되어 큰 논란이 되었던 해양수산부의 TAC 고시 제6조 단서규정에 대해서도 분명한 원칙을 가지고 대처해야 한다고 봅니다. 그동안 통발어선들이 통상적인 조업과정에서 총허용어획량 대상어종이 부수적으로 어획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는 단서 조항을 들어 자신들의 조업행위를 정당화하는 근거로 활용해왔습니다만 이 단서조항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충분히 논의되고 반드시 삭제되어야 한다는 필요성에 대한 합의 역시 더이상 재론의 여지가 없는 상태라고 봅니다.

본 의원이 파악한 바에 의하면 해양수산부도 경북도가 단서조항의 폐지를 요청할 경우 이를 수용하겠다는 입장입니다. 따라서 제6조 단서조항의 폐지에 대해서는 도지사의 확고한 의지가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최대한 빠른 시간 내에 단서조항을 삭제하여 불법 어업에 대한 단속을 실시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실지 답변 바랍니다.

대게조업과 관련해서 한 가지만 더 질문하겠습니다.

앞서 본 의원은 일관되게 대게 자원보존의 필요성에 대해 지적했습니다. 지난해에 발생해서 올해 초까지 계속된 대게 관련 문제도 경상북도의 주요 수산물목인 대게 자원의 보존을 위해 체계적인 대책을 갖고 있지 못했기 때문에 발생한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따라서 앞으로도 경상북도 차원의 대게자원 보전 및 육성에 대한 종합적이고 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보는데 본 의원의 제안에 대한 지사님의 견해와 계획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최근 몇 년 전부터 그 피해가 날로 증가하고 있는 해안 침식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10월에 경상북도는 ‘청정 동해 바다를 국민들에게 친숙한 관광 레저 공간으로 조성하고 고부가 가치의 해양과학기술개발 및 산업화, 항만, 물류 인프라 조기 구축 등 21세기 해양경북시대를 개척하기 위한 ‘동해안 해양 개발 기본계획’을 발표한 바 있습니다.

2007년부터 본격 추진되기 시작한 동해안 개발 사업의 경우 금년 한 해에만 자체 사업 26개, 국비보조 사업 6개 등 총 32개 사업에 1,652억원의 예산이 투입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해양개발사업의 토대 중의 하나인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의 경우 5개소에 도 자체사업비 40억원과 군특 36억원 등 총 76억8,200만원 밖에 사업비가 투입되지 않은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더욱 우려되는 것은 해안침식 방지시설 사업추진의 기준이 되는 연안침식 실태 및 대응방안 연구용역비 2억원을 2007년도 추경 예산으로 확보한다는 것입니다.

해안침식의 문제점에 대해서는 이미 몇 년 전부터 그 심각성이 제시되어 왔고, 인근 강원도의 경우 관련 연구를 병행하면서 국가 차원의 대책 수립을 강력하게 촉구하고 있는 것에 비해 매우 미흡한 수준입니다.

본의원이 경상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최근 3년간 경상북도 해안의 침식관련 자료를 보면, 경상북도 해안의 경우 서·남해안에 비해 비교적 소규모 형태로 발생되고 있으나, 매년 꾸준히 증가되는 추세를 보이고 있습니다.

연안 침식의 발생유형을 보면, 백사장 침식이 총 35개소이고 연안침식 발생 지역 중 85.7%인 30개소이고, 호안붕괴가 11.4%인 4개소, 토사포락은 1개소인 것으로 나타나고 있습니다.

현재 도내에서 연안침식이 발생한 해안선은 전체 428km중 35km로 도내 해안선 중 7.3% 정도에서 발생하였습니다.

연안침식의 주요 원인으로는 지구온난화에 따른 해수면 상승과 항만, 어항, 도로 등 연안개발에 따른 연안류의 변화로 추정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원인은 그동안의 국내외 연구 성과를 근거로 한 추정일 뿐, 경북지역의 연안침식에 따른 구체적인 연구를 진행한 적은 없었으므로 확인하기에는 이르다고 봅니다.

지사님께 묻겠습니다.

본의원이 자료를 분석한 바에 의하면, 경상북도내 총 34개소의 연안침식 발생 지역 중 영덕군 남정면 원척리 백사장 침식 지역 단 1곳을 제외하고 나머지 전 지역의 인근에 방파제나 어항시설이

설치되어 있었습니다.

그렇다면 지구온난화가 연안침식의 근본적인 원인일 수는 있지만 직접적인 원인은 인근에 설치된 인공시설물에 있는 것으로 봐야 한다고 봅니다.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동안 연안침식이 수년간에 걸쳐 도내 연안 전 지역에 광범위하게 진행되어 왔음에도 불구하고 이에 대한 원인 조사와 방지대책 수립을 위한 연구를 진행하지 못한 것은 잘못이라고 생각합니다.

앞으로 연안침식 문제를 전문적으로 연구하는 기관을 설치한다든지, 아니면 관련 연구기관과 협력 연구시스템을 구축하는 중장기적인 대책을 수립해야 한다고 봅니다.

연안침식의 문제는 단순히 모래 유실의 문제가 아니라 연안생태계를 파괴하고 휴식 및 생활공간인 국토를 잠식함으로써 막대한 사회 경제적 피해를 유발하는 심각한 사안입니다.

당장 눈앞에 보이는 피해가 크지 않다고 해서 이를 방치할 경우 앞으로 짧은 기간 내에 엄청난 피해가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지금부터 차근차근 연안침식 방지대책을 수립하여 연안 개발과 보존을 동시에 추진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보는데, 앞으로 어떻게 할 계획이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장애인 고용촉진 시책 추진과 관련해서 질문하겠습니다.

지난해 4월 한국장애인단체총연맹이 발표한 전국 16개 시·도 장애인복지인권 수준 평가에 의하면 경상북도는 전국 16개 시·도의 보건, 의료, 교육, 소득 및 경제활동 등 10개 영역에 대한 총 평가에서 충청북도와 전라북도에 이어 14위를 차지하였습니다.

장애인 등록인구가 전국 평균보다 높은 4.42%이면서 재정자립도는 오히려 전국 평균 이하인 29.6%인 경상북도의 현실 여건을 감안한다고 해도 부끄러운 결과가 아닐 수 없습니다.

본의원이 경북도로부터 제출받은 자료를 분석한 결과 역시 이런 평가에 어긋나지 않았습니다.

현재 우리나라는 '90년에 제정된 장애인고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 규정에 의해 모든 공공부문과 상시고용 50인 이상의 사업장에 대해 2% 이상을 장애인으로 채용하도록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경상북도청과 전체 23개 시·군의 2006년도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전체 비율은 2.2%로 기준 이상으로 나타났지만, 경주시 1.3%, 칠곡군 1.3% 등 아직까지 의무고용비율을 지키고 있지 않는 시·군이 10개 지역에 달합니다.

2005년도 말을 기준으로 한 50인 이상 상시 사업체의 장애인 고용비율 역시 1.56%로 의무고용비율이 지켜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재 일반 기업체의 장애인 고용에 관한 사항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별도로 설립된 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전담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장애인 고용과 관련된 업무의 대부분이 공단을 통해 진행된다고 해서 경상북도가 장애인 고용 확대를 위해 아무런 대책을 세우고 있지 않는 것은 분명 잘못이라고 봅니다.

도지사님께 묻겠습니다.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3조를 보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에 관하여 사업주 및 국민 일반의 이해를 높이기 위하여 교육·홍보 및 장애인 고용촉진운동을

지속적으로 추진해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김관용 도지사님의 취임 이후 경상북도가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해 어떤 시책을 추진해왔는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동법 제3조2항에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장애인의 특성을 고려한 직업재활의 조치를 강구하여야 하며,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도모하기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종합적이고 효과적으로 추진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본의원이 장애인 고용현황에 대한 자료제출을 경상북도에 요청했을 때 일반 사업장의 장애인 고용현황은 도청 차원에서 별도로 관리하지 않고 있는 상태였습니다.

이와 같이 장애인 고용에 대한 기본 통계조차 확보하지 않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고용촉진에 관한 시책을 추진할 수가 있겠습니까?

경상북도청과 23개 시·군의 공무원을 대상으로 한 장애인 고용현황을 보면, 2005년에는 전체 평균 고용비율이 2.5%였는데, 2006년에는 오히려 2.2%로 감소하였습니다.

오히려 도청과 시·군 공무원들의 장애인 고용비율이 2006년도에 오히려 감소한 이유가 무엇입니까?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3조에 의하면 “의무고용 비율을 달성하지 못한 자치단체는 2% 달성시까지 신규채용 인원의 5%를 장애인으로 채용하여야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2006년 현재 장애인 의무고용 비율이 지켜지지 않는 도내 10개 시·군에 대해서는 앞으로 신규채용 시 5% 장애인 채용비율을 지킬 수 있도록 엄격히 행정지도를 해야 한다고 보는데 어떻게 하시겠

습니까? 답변바랍니다.

다음은 경상북도 도서관 운영에 관하여 교육감님에게 질문하겠습니다.

자료에 의하면 2007년도 현재 도내 학교도서관 현황을 살펴보면, 초·중·고 전체 979개교, 학생수 38만8,951명에 951곳이며, 장서보유수는 597만9,209권이고, 학생들을 지도할 사서교사 54명, 전담인력 2명, 학부모 도우미가 5,186명입니다.

그리고 학교도서관 이용실태를 보면, 하루 평균 이용자수는 10만 5,798명이며, 전체 학교도서관 1일 평균 운영시간은 3,782.7시간으로 나타났습니다. 또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도서관 단위사업별 활성화 추진상황을 보면, 도서관 활성화 사업에 213억 4,500만원, 농어촌소규모사업에 12억 8,000만원, 농산어촌 사업에 19억원, 디지털도서관사업에 14억 700만원, 환경개선사업에 4억 4,000만원, 특별교부세 89억 5,700만원 등 모두 353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습니다.

질문하겠습니다.

본의원이 앞서 자료를 분석해보면 학생수 1인당 장서수는 불과 15.37권이며, 도서관수 대비 사서교사는 0.055명으로 학교도서관 운영이라는 측면에서 한 마디로 부끄러울 지경입니다. 대폭적인 장서 확충방안과 사서교사 확충방안을 구체적으로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학부모 도우미가 5,186명으로 나타나 있는데 학부모 도우미의 선정기준은 무엇인지 답변해주시고, 학부모 도우미 교육

프로그램은 있는지? 있다면 상세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 학교도서관 하루 평균 이용 학생수는 전체 학생대비 3.67명당 1명으로 상당히 높은 비율이나 사교육비 등을 감안할 때 이용률을 더욱 높이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견해는 무엇인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지난 2003년부터 2006년까지 학교도서관 활성화사업 추진에 있어서 6개 사업에 모두 353억 2,900만원의 사업비가 소요된 것으로 나타나 있는데 구체적인 사업비 내역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본의원의 견해로는 21C 교육·문화의 시대를 맞아 이제 학교도서관도 단순히 책을 빌려주는 곳에서 만족해서는 안되며, 다양한 운영프로그램을 개발하여 학생들의 수요에 전적으로 충족시키는 전인교육을 함양하는 교육·문화공간으로 거듭 태어나야 한다고 보는데 교육감의 견해는 어떠신지 이 자리를 빌려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모두 마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보충질문

○ 농수산국장님께 질문드리겠습니다.

지난해 10월부터 발생한 대게문제에 대해서 자망어업인들과 통발어업 방식의 차이점에 대해서 분명히 알아야 합니다.

지금 통발어업이... 통발을 우리 의원님들 좀 잘...

통발로 해서 대계를 잡는 조업방식입니다. (통발 보여주며)땅 밑에 물 속 깊이 넣어서 이렇게 끈을 묶어서 하는 방식이 통발로 하는 방식입니다.

(이때, 그물 보여주며)그리고 이것이 그물로 저 통발의 그물크기에 비해서 자망어민들이 잡는 크기는 그물코가 상당히 큼니다.(통발을 가리키며)이것 두 배 이상됩니다.

자, 이 두 가지 조업방식에 대해서 국장님 어떤 차이가 있다고 생각하십니까?

- 그렇게 생각하시죠?
- 그래서 대계자원을 보호하는 차원에서 근해 통발어선들이 연근해 조업을 하는 것을 제한해야 된다, 즉 ‘통발로 잡는 것은 제한해야 된다’ 하는 자망어민들의 주장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제가 아까 본 질문에서도 대계 자원보호를 위해 어업간 수심, 어구제한, 출어 횟수 등에 대해서 경상북도 차원에서 강제조치를 취해야 한다는 질의였습니다. 예상대로 지금 국장님 말씀대로 “법에 근거했다, 이렇게 해서 어쩔 수 없다” 하는 그런 그냥 두루뭉술한 답변만 하고 계속 넘어갔습니다.

이런 부분들이 이런 질문을 할 때 대답할 걸 예상을 했습니다. 왜냐하면 우리 이런 답변이 오늘 내일 한 게 아니고 작년부터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수없이 되풀이 했는데도 경상북도에서 해양수산부에 미루고 해양수산부에 가면 경상북도가 알아서

할 일이다 이렇게 미루고, 이렇게 해서 계속 답변만 왔다 갔다 하는 그런 현상이 되었습니다.

- 우리 경상북도에서 수산행정을 하시면서 작년 11월달부터 이런 문제점이 발생되었는데 이런 부분에 대해서 올해 추경에 예산을 확보해서 하겠다, 그것도 울진군 얼마, 영덕군 얼마 이렇게 해서 각 시·군에서 예산을 받아서 하겠다 하는데, 이런 대책에 대해서 원론적으로 언제, 어떻게 하겠다 하는 그런 내용은 없고, 그냥 “예산 추경에 반영해서 하겠습니다” 하는 그런 답변을 하셨습니다.

지금 이렇게 연안에서 대게를 통발로 잡으면 언제 없어질지, 작년도에 잡았던 대게 양과 올해 잡았던 대게 양이 엄청난 차이가 납니다. 만약에 내년에 가면 극단적으로 말해서 대게가 없어질 지도 모른다는 이런 현실이 되었을 때 예산 타령하고, 언제 우리가 1년 기한 걸리겠다, 그럼 올해 지금 11월달부터 다시 조업을 실시하면 또 어업과 자망과 이런 대게가 분쟁을 하고 데모를 하고 이렇게 하는데도 그냥 우리가 조치를 취하겠다 이런 건 문제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국장님께 묻겠습니다.

우리 경상북도 도내에 현재 대게 총 어획량이 얼마가 되고 그걸 팔게 되면 얼마 되는지 알고 계십니까?

- 판매량만 그렇죠?
- 어판장에 의해서 판매한 양만 지금 그렇습니다. 그리고 소도읍, 그 금액 중에서 연근해 어업에서 총 생산량은 얼마이고 또 그

중에서 연근해, 통발로 잡은 대게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얼마라고 생각하십니까?

- 그 2~3%가 제가 볼 때 2~3%가 아닙니다. 연안에서 통발로 잡는 것이 2~3%가 아닙니다. 더 그런 부분들도 확실히 한번 확인해보시고, 근해 통발어선들이 앞으로 연근해에서 계속적으로 조업을 해 가지고 대게 자원이 없어진다, 통발로 잡을 때 대게가 앞으로 우리 대게자원에 어떤 영향이 미칠지에 대해서 한번 검토해본 적 있습니까?
- 아니 구체적으로 이렇게 대게에 지금 문제가 발생했다, 발생했을 걸로 해서 우리 근해 통발로 대게를 잡았을 때 지금 잡는 양과 이런 걸 했을 때 앞으로 대게가 얼마만큼 더 갈 것이냐, 대게에 영향이 미치냐, 우리가 잡는 어획량에 미치는 영향에 대해서…
- TAC 물량도 우리가…
- 국장님의 답변에 자원 번식을 위해서 연구소에서 대게를 자원 번식해서 우리가 방류하는 그런 방법이 있는데, 방류해서 풀어주고 또 통발로 잡으면 잡는 숫자가 더 많아질 텐데요.
- 그 조치가 어떤 조치입니까?
- 금지구역이라는 거… 그럼 언제 하시겠습니까?
- 그런 프로그램들이… 1년 동안에 그럼 올 11월달하고 또 내년 5월달까지 또 이렇게 연안과 대게 잡는데 또 분쟁을 해야 됩니까?
- 이런 부분들이 왜 추경예산 편성하고 예산 끝나고 난 뒤에 실험, 조업, 연구, 다시 공청회를 하다 보면 또 올해 다 보내고 내년도 되면 또 뭐 하다 보면 또 1년 지나갑니다. 이렇게 되는 동안에

대게는 계속 자원이 고갈됩니다. 어업인의 입장에서, 어민들의 입장에서 모든 행정을 펴주실 것을 부탁드립니다.

- 또 그리고 아까 근해통발어선이 지금 대게 허가를 가지고 대게라는 것이 분류가 있기 때문에 우리가 어떻게 할 방법이 없다고 말씀하셨죠? 그렇게 말씀하셨지 않으셨습니까?

지금 통발어선으로서 대게를 잡는 건 법적하자가 없다 이렇게 말씀하셨죠? 어찌 제제할 조치가 없다?

- 하자가 없는 것은 결국 우리가 조치할 수 없다는 결론 아닙니까? 그렇죠?

그렇다면 대게 TAC물량을 고시하기 전에 단서조항 제6조 통상적인 방법에 의해서 아닌 부수적인 방법에 의한 어획량에 대해서는 우리가 어떻게 할 수 없다 하는 그게 법적으로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면 근해통발어선들의 통상적인 조업방식이 어떤 것이냐, 근해통발어선들이 수심 700m에서 2,000m까지 해상에서 홍계를 잡았던 그 이상에서 잡았지 않아요, 그게 그동안 통상적인 조업방법이 아닙니까? 그렇죠?

대게 통발 잡을 때 밑에 300m, 200m에서 대게 잡는 게 그 사람들의 통상적인 조업방법이 아니고 700m, 2,000m 먼 바다에 나가서 대게를, 홍계를 잡아와서 수출하고 수산물공장... 그게 통상적인 조업방법이죠?

그런데 작년 11월달부터는 근해통발도 수심 700m 안에 들어와서 통상적인 조업을 실시한 방법이 있습니다. 작년도 11월 이전에 홍계통발업들이 와서 대게를 잡은 적이 있습니까?

- 수출 감소가 아니고 제가 말씀드리는 건 700m 안에, 작년 11월 이전에도 근해통발어선이 통발을 이용해서 700m 안에 와서 대계를 잡았냐, 안 잡았냐 이거죠?
- 그렇다면 제6조 단서조항에 통상적인 조업이라고 볼 수 없지 않습니까? 이 잡는 방법은 어떻습니까?
- 지금 6조 단서조항에 TAC물량을 안줬을 때는 대계를 잡을 수 없지 않습니까?
- 없는데 지금 통발어업들이 잡는 것은, 단서조항 단 부수적인, 통상적으로 잡는 방법에 의해서 부수적으로 할 경우에는 대계를 잡을 수 있다는 것 아닙니까? 그러니까 통상적인 방법은 700m 안에서 잡은 적은 작년 11월 이전에는 전혀 없었다 말입니다. 그 과정에서 지금 다시 300m에서 잡는 것은 통상적인 조업방식이 아니라고 봐야 될 것 아닙니까? 그렇죠?
- 통상 단서조항에 의해서 700m에서 대계를 잡을 수 있다면 왜 굳이 근해 통발어업들이 울진군에다 작년 11월달에 대계 TAC물량을 신청한 이유가 뭡니까? 그냥 다 잡을 수 있는데 잡으면 되지 왜 굳이 대계통발어업들이 우리에게 어업 TAC 물량을 달라고 울진군에 신청합니까? 그 이유가 뭡니까? 이 부분이 통상적인 조업방법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것 아닙니까?
- 이 TAC물량에 대해서 제가 심도 있게 질문해야겠습니다. 이런 부분을 신청하는 과정, 우리 경상북도가 취했던 방법, 각 시·군이 취했던 방법을 볼 때 근해통발한테 대계를 잡을 수 있도록 소설을 쓴 겁니다.

- 우리 경상북도에서 소설을 쓴 게 아니라 전체적으로 우리가 느꼈을 때 말입니다. 제가 경상북도를 표현하는 게 아니라 그런 제 느낌입니다. 잡을 수 없는데 그렇게 잡도록 허용했다, 유보했다, 다시 단서조항을 6조 단서조항을 붙였다, 이런 건 그런 부분에 제가 봤을 때는 소설을 썼다고, 그러니까 본의원이 스스로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렸듯이 자망어민들도 우리 큰 그물을 가지고 대게 잡기가 힘듭니다 한데 그 자망어민들이 앞으로 통발을 갖고 잡겠다, 작은 그물 크기 규격 가지고 앞으로 대게 잡아올리겠다 하면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전혀 지금 법적 문제가 없는 걸로 돼 있는데.

- 지금 대게 잡는 통발어선들이 그물로 인해서, 통발로 인해서 대게를 지금 잡는 것이나 자망어민들이 행정에서 이렇게 안하는데 우리도 큰 그물보다 작은 그물로 쉬운 방법으로 대게를 잡겠다는데 그걸 법적으로 우리가 제한할 방법이 없잖아요?
- 지금 자망 쪽이나 이런 쪽에서는 대게를 지키려고 하는데 통발 쪽에서 안 지키고 있잖아요. 안 지키는데 한 쪽만 지키라하면 그건 잘못된 것 아닙니까?
- 제도적 장치이지만 어업인 자기 스스로 요구하고 노력할 수 있도록 우리 도에서 행정 조치를 취해야 되는 것 아닙니까?
- 그럼 우리가 앞으로 자망어민들도 통발로 잡아도 이의 없으시죠?
- 그리고 대게를 야간에 조업하는데, 이런 방법을 폐지하는 방법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엄청난 자원보호가 되는 걸로 조사결과가 나왔습니다. 그거 조치를 하시겠습니까?
- 저 역시 한일어업으로 인해 홍게어장이 축소되고 또 홍게 수출 물량이 감소돼 어려움을 겪고 있는 근해통발어민들한테 정말 심정은 충분히 이해합니다. 본의원도, 대게 자원이 안정적으로 보전될 수 있다면 통발어선들이나 자망어선들이 함께 사이 좋게 조업해가지고 어민들과 함께 이익을 창출한다면 얼마나 좋은 일이겠습니까?

문제는 그 동안에 각고의 노력을 해온 대게자원이 무원칙하게, 무책임한 우리 수산당국의 조치로 인해 한순간에 사라질 위기에 처해 있습니다. 어업 자원을 망치는 것은 짧은 시간에 망칠 수 있습니다. 하지만 이를 다시 복구하는 데는 게가 커서 어미가 되기까지, 우리가 잡을 수 있을 때까지는 엄청난 시간과 몇십 배의 노력이 필요합니다.

경북도의 대표적인 어업품목으로 우리 관광상품의 발전에도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대게자원이 보전이라는 대원칙에 어긋나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된다고 생각합니다. 이런 조치를 취해주실 것을 다시 한 번 강조하면서 제 질의를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 손진영 의원(행정보건복지위원회) ◎

오후시간에 보니까 자리가 많이 비었습니다. 앞으로는 도정질문 하려면 맨 첫 날 첫 번째로 질의해야 좋을 것 같습니다.

오늘 자리에 우리 의원님, 우리 지사님, 또 교육감님 계신데 요즘 소값이 많이 떨어져서 복사를 해서 좀 놓았습니다.

존경하는 안순덕 부의장님, 그리고 선배·동료의원 여러분.

행정보건복지위원회소속 영주시 출신 손진영 의원입니다.

김관용 도지사님과 조병인 교육감님을 비롯한 관계공무원 여러분 노고가 많으십니다.

본의원이 질문에 들어가기 앞서서 분위기 환기를 좀 한 다음에 질문에 들어갈 예정입니다.

본의원이 도정질문을 준비하는 가운데 물론 충실한 답변을 위해서 집행부공무원들께서 해당 내용과 좀 까다로운 질문은 내용을 바꾸어 줬으면 하는 이야기를 저뿐만 아니고 우리 동료의원님들께서 많이 듣고 계셨습니다.

물론 이게 관행이라고 해도 이제는 달라져야 되고 바꾸어야 할 때가 되었다고 봅니다. 그래서 그 내용을 가지고 왔습니다. 필요하다면 실명과 내용을 공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러나 이따가 답변시간에 앞으로는 도정질문에 이러한 관행들이 없어져야겠다는 것을 우리 도지사님과 교육감님께서 답변해 주시면 그냥 넘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최근 우리 사회에 양극화 정도가 심화되면서 소득분배 형평성도 날이 갈수록 악화되고 있습니다. 더욱이 국내 축산과 과수농업의

중심지인 우리 경북은 이번 한·미FTA 협상타결로 인해 최대의 피해지역이 될 가능성이 더욱 커져있는 상태입니다.

이에 300만 도민들은 실제 피부에 와 닿을 수 있는 선진도정을 기대하고 있음을 잊지 마시고, 오늘의 난관을 극복해낼 수 있도록 배전의 노력을 기울여주실 것을 당부하면서 본의원의 도정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첫째, 투자유치와 관련하여 말씀드리겠습니다.

그동안 우리 경북은 기업투자유치를 통한 7만개의 일자리 창출을 목표로 정하고 투자통상본부장에 전문가를 영입하고 올 들어 국내외 기업으로부터 1조원에 육박하는 투자를 유치하는 실적을 만들어낸 바 있습니다. 그러나 이러한 과정에서 본의원은 우리 도의 양해각서 체결과 관련하여 문제점을 지적하고자 합니다.

MOU 즉, 양해각서는 종전과 같이 국가간의 외교에서 활용되는 것뿐만 아니라 최근에는 국가와 기관, 지방정부와 기업 간에도 다양한 형태로 체결되어 정식계약 체결에 앞서 의견을 조율하고 확인하는 상징적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다보니 책임과 의무, 업무내용과 절차 등 구체적인 사항을 포함하지 않는 것이 일반적이며 이에 따라 계약체결 당사자의 의지나 여건 등을 따지지 않고 일단 양해각서부터 체결하는 관행이 생겨나고 있는 상황입니다.

물론 양해각서 체결을 많이 하는 것이 잘못이 될 수는 없습니다. 그러나 양해각서는 자칫 결과가 좋지 않았을 때는 양측의 공동협력 의지를 대외에 천명하기만 하고 상호구속력이 없어 무산되는 경우도

없지 않았기 때문에 양해각서를 체결하기까지의 예산과 인력을 낭비한 채 전시용, 홍보용이었다는 비난을 면하기 어려우며, 더욱이 일부 양해각서는 처음의 의도와는 달리 체결상대방의 사정 등으로 인해 계속 지연되거나 사업의 내용이 언제 실현될지도 모르는 상태에 있어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이에 전문가 등에 의한 신중한 사전검증과 이해당사자의 철저한 검증을 통해 선택과 집중에 의한 양해각서를 체결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둘째, 경북 북부지역과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지역으로 알려져 있는 우리 경북도의 북부권은 오랫동안의 정책적 노력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답보상태를 면치 못하고 있습니다. 바로 얼마 전 경북도는 경북 북부와 동해안 숙원 사업을 오는 12월 대통령 대선공약으로서 채택되도록 추진한다는 것을 밝히면서 중앙선 복선전철화, 동서 6축 고속도로 건설, 36번 국도확장,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등을 각 정당에 건의한 바 있습니다.

그러나 본의원은 이 공약사업들을 선정하면서 북부권 지방자치 단체들과 한번이라도 협의하였는지 묻고자 합니다. 본의원은 전국 제일 오지인 경북 북부지역과 동해안의 울진지역 일대의 교통문제를 해결할 뿐만 아니라 서해안의 아산만권, 대전 청주권, 중부내륙권을 횡으로 이어주어 경제성이 높을 뿐만 아니라 공간활용도가 가장 높을 것으로 예상되는 동서 5축 고속도로가 오히려 더욱 시급한 사업임에도 이와 관련한 아무런 언급이 없다는 것은 의견수렴과정에

문제점이 있음을 지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지역경제발전은 도로교통 발전의 여부에 따라 좌우되어진다고 볼 때 경북 북부지역의 발전을 위한 동서 5축 고속도로의 적극적인 추진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와 아울러 경북 북부권을 중심으로 한 관광인프라 구축의 일환으로 지방도의 증설이 가장 시급하다고 봅니다. 안동과 영주를 중심으로 한 유교문화권을 특화시켜 관광객을 유치한다는 전략은 매우 긍정적이라고 하겠으나 실제 관광객들이 쉽게 관광지에 접근할 수 있는 도로는 상대적으로 미흡하여 문제점으로 지적할 수 있습니다

가령 지방도 931호선 풍기~부석 구간은 중앙고속도로, 소백산, 풍기온천과 경륜훈련원, 순흥유교문화권, 부석사를 연결하는 중요한 관광도로이나 굴곡이 심하고 최근 교통량이 급증하여 도로의 확·포장이 시급한 실정입니다.

사정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관계당국은 이러한 현지사정을 정확히 파악 못하고 2007년에 편입토지보상 및 공사가 불가능하다는 이야기가 흘러나오고 있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이에 본의원은 전국 최고의 낙후지역으로 남아있는 경북 북부권역 개발을 위한 정책을 시행함에 있어 그 우선순위를 정할 때 북부권역의 주민들이 가장 원하는 사업을 우선적으로 실시해야 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앞으로 경북도와 북부 11개 시군의 협의를 형식적인 운영에서 벗어나 실질적으로 정례화하고 협력을 강화해나가는 것이 필요하

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도 아울러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북부권의 획기적인 발전을 위해서는 경북 북부권 11개 시군을 종합적으로 개발할 수 있는 대단위 경북 북부권 종합개발 계획을 시·군의 의견 수렴 하에 수립하고 나아가서 경북 북부권역 발전을 위한 특별법 제정 등을 건의하고 적극적으로 추진할 의향은 없는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동안 유교문화권개발사업이 북부권역 발전을 위한 큰 역할을 하여왔음은 잘 알고 있으나 동 사업이 오는 2010년 완료되기 때문에 향후 이를 대체할 수 있는 북부권역 발전을 위한 성장동력 사업은 무엇이라고 보는지 아울러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점심도 드시고 줄음도 오시고 하니까 세 번째, FTA 타결에 따른 축산업 대응과 관련하여 질문, 네 번째 우리 교육감님께 학교 운동부와 관련한 질문, 다섯 번째 교육운영체계와 관련한 질문은 서면으로 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보충질문을 좀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대단히 고맙습니다.

한·미FTA가 체결된 이후 우리 농업은 절망에 빠지고 있습니다. 그 중에서도 축산농가들이 느끼는 고통은 상상을 초월하고 있습니다.

농촌경제연구원에 따르면 현행 40%인 쇠고기 관세가 10년 동안 단계적으로 낮아질 경우 연간 국내 쇠고기 생산 감소액은 2,214

억원에 달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우리 경북은 2006년 12월 현재 총 4만2,312개 농가에서 46만 3,841만두(한·육우)를 사육하는 등 국내 쇠고기 사육농가의 10%를 차지하고 있는 만큼 FTA 협상타결은 직격탄이나 다름없다고 할 것입니다.

특히 호주산에 비해 미국산 소고기가 관세 없이 들어오면 한우는 아무리 고급육 생산을 해도 한 사람이 60만마리 이상 사육하는 미국의 생산기반에 우리 한우기반은 대책 없이 무너질 수밖에 없다는 한숨이 넘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해 경북도는 한·미 FTA 체결에 따른 축산시장 개방에 대응해 내년부터 5년간 54개 사업에 총 5,400억원을 투자키로 하고 특히 올해까지 시범추진중인 경북한우클러스터 사업을 2016년까지 연장할 계획임을 밝힌 바 있습니다.

또한 지역 소비자들에게 한우의 위생과 안전성에 대한 확고한 믿음을 주고 수입육과 손쉽게 구분할 수 있는 시스템만 구축된다면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이야기하지만 한번이라도 현장의 목소리에 귀기울여보았는지 묻고 싶습니다.

실제 한·미 FTA 체결이후 영주지역에서는 다섯 번의 우시장이 열렸습니다. 가격 하락폭은 장을 거듭할수록 더 커지고 있다는 것이 현장의 목소리입니다. 암송아지가 지난 겨울에 비해 110만원에서 120만원여 하락하여 200만원 가격대가 이미 무너졌으며 이에 불안을 느낀 중소 축산농가들의 홍수출하로 소값은 앞으로 더욱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자꾸만 커지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특히 영주 우시장은 전국에서도 내노라 하는 10대 우시장으로 성수기에는 6억원 이상의 돈이 오갔으나 지난 30일장에는 346두의 소가 출하되어 30% 미만의 매매가 이루어지는데 그치고 거래금액도 4억원에도 훨씬 못 미치는 등 FTA의 악영향이 분명하게 가시화되고 있습니다.

이에 본의원은 당장 축산농들의 불안과 우려를 씻을 수 있도록 현장위주의 축산대책이 실제적으로 마련되어야 한다고 봅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지난해 농수산물유통공사가 한우의 평균유통비용을 분석하였는데 농가에서 489만원에 판 소를 소비자는 무려 805만원에 사고 있는 것으로 조사된 바 있습니다. 그 차익의 대부분은 결국 유통업자와 최종판매자가 챙긴다는 것인데 이러한 기형적인 가격 구조는 한우에 대한 불신만을 높여 한우의 품질과 가격에 대한 의심이 들기 시작한다면 그 여파는 쇠고기 수입개방보다 더 치명적이라 할 것입니다.

지금도 산지 한우값은 계속 하락하고 있음에도 불구하고 소비자 가격은 전혀 내리지 않는 현재의 한우유통구조를 혁신하는 방안은 무엇인지도 말씀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아울러 한우산업의 안정을 위해 도입한 식육원산지 표시제 시행이 올해 1월부터 홍보, 계도 및 점검 지도기간을 거쳐 5월부터 단속이 시행되고 있습니다. 그러나 정부 보조금보다 수입산이 한우로 둔갑하는 상황을 막는 제도적 장치가 더 시급한 마당에 음식점의 원산지 표기여부를 단속하는 기관은 농림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등이

배제된 채 보건복지부로 되어 있는 것도 원산지표기제도의 실효성을 떨어뜨리고 있어 개선책이 하루빨리 마련되어야 한다고 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입니까?

넷째, 학교 운동부와 관련하여 질문드리겠습니다.

학교 운동부는 본래 운동을 통해 학생들의 신체적 건강과 시민 정신을 함양하기 위하여 도입되었습니다. 그러나 운동실적으로 모든 것을 평가하고 엘리트체육에 종사하는 사람은 오로지 메달에만 관심 쏟고 경기에서의 승리가 운동의 전부인양 오해하는 안타까운 일이 비일비재하게 일어나고 있습니다.

가장 대표적인 경우로 운동부 학생들에 대한 폭력입니다. 지난 4월 30일 국가인권위원회의 조사에 따르면 초등학교 운동선수의 경우 80% 가까이가 신체 내지는 언어폭력에 시달리고 있으며 이 중에서 남학생과 여학생 일부는 성적 폭력까지 당한 경험이 있다고 하는 놀라운 사실이 알려졌습니다.

이는 학생들끼리의 문제가 아니라 어른들이 성적 향상 등 이런 저런 목표나 실적을 위해 폭력을 조장하거나 방조하는데서 오는 결과로 폭력으로 금메달을 딴다고 하여도 그것이 우리 사회에 얼마나 도움이 되겠습니까?

또한 운동부에 속한 선수들은 선수이기 전에 학생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아예 공부를 남의 일로 치부하는 일이 만연하여 폭력에 대한 정도는 더 심해지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입니다.

지금이라도 운동부에 속한 운동선수의 학습권을 보장하고 운동부 내 폭력을 근절하기 위한 조치들이 적극적으로 시행되어야 할 것

으로 생각되는데 이에 대책은 무엇입니까?

그런데 이러한 학교폭력에 대한 단일한 인식은 운동부에만 해당되는 것은 아닌 것 같습니다. 지난 3월 도교육청은 공문을 통해 도내 학생야영장 사용과 관련하여 사설 또는 다른 행정기관의 수련시설에 입소를 불허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행·재정적인 조치를 부과한다고 하고 야영장소를 교육청 산하 야영장 사용을 강요하여 물의를 빚은 적 있습니다.

그러나 현재 학생야영장은 재래식 화장실에 턱없이 부족한 샤워 시설 그리고 구시대의 군대막사와도 같은 잠자리 속에서 과연 얼마나 많은 교육적 효과를 거둘 수 있을지 대단히 의문스럽습니다.

이에 야영장시설의 개선과 야영교육의 자율성을 높이는 것은 물론 전면 수정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보이는데 이에 대한 대책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지난 4월말경 대구의 한 여중생이 아파트에서 투신자살한 안타까운 일이 있었습니다. 또 지난 5월 4일 모 초등학교 교사가 학생체벌과 관련하여 교육청에서 조사를 받은 뒤 스스로 세상을 등진 일이 또 발생하였습니다.

이와 같이 학교문제로 인하여 극단적인 선택을 하는 일들이 우리 주위에서 연이어 일어나고 있는 것에 대해 안타까움을 금할 수 없습니다. 이와 관련하여 일부 전문가들은 학교교육체제가 교육부, 교육청, 그리고 교장으로 이어지는 폐쇄적인 관료조직체제가 모든 일들을 다 처리하려 하다보니 생겨나는 것으로 지적하고 있으며

이에 본의원은 ‘학교 자율권 제도화’가 시급하다는 것에 전적으로 동의하는데 현재 교육감께서는 이에 대하여 어떠한 견해를 가지고 계신지 말씀하여주시기 바라며 아울러, 이와 관련하여 경상북도교육청에서 학생 생활지도에 특별한 대책이나 방법에 대해서 교육감의 소견을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보충질문

- 보충질문에 들어가기에 앞서서 본의원이 아까 모두 질문 때 우리 지사님께도 그렇고 우리 교육감님께도 그렇고 앞으로 이런 관행을 좀 고쳤으면 하고 답변을 해주셨으면 했는데, 답변이 없었습니다. 그 답변을 좀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만약에 다음에 도정질문 할 때부터 우리 의원님들 질문에 있어서 가령 원고내용을 바꾼다거나 이런 문제가 있을 때는... 지사님, 지사님, 저 좀 쳐다보십시오. 징계를 하시겠습니까? 답변을 해주시고...
- 의장님, 여기에 대한 답변을 듣고 보충질의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교육감님하고...
- 투자통상본부장님 잠깐 좀 나오시죠.
여러 가지로 고생이 많으십니다.
- 본부장님은 언제 오셨죠?
- 투자통상본부장님께 양해각서 체결 관련하여 보충질문을 드리

겠습니다.

본의원의 질문에 대하여 2007년 5월 현재 금년 목표 10억불 초과 달성되었다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우리 도의 투자양해각서의 체결이후 대부분 투자가 정상적으로 이행되고 있다고 답변서에 나와 있습니다. 맞죠?

- 그러면 투자통상본부장님은 정말 투자양해각서가 체결되고 정상적으로 투자가 이루어졌다고 보시는지 답변해주시십시오.
- 그러면 우리 본부장님 보시기에 중복되거나 혹은 다소 과장된 부분은 없다고 보십니까?
- 우리 본부장님이 워낙 애를 많이 써니까, 본의원이 보기에는 한 가지 예로 지난 3월 14일날 쿠어스텍이라는 미국인 회사와 세라믹 장비 공장 증설의 내용으로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2011년까지 1,000만 달러 투자하기로 한 바가 있지요. 맞습니까?
- 그런데 경북도는 1,000만 달러 투자 양해각서 체결하면서 미리부터 5년 이내에 투자예산까지 넘겨짚고 과잉홍보를 하는 것이 아닌가 하는 우려를 하는 시각들이 있습니다.

칠곡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것을 두고 과장된 고용창출을 내세우는 것은 양해각서의 내용을 부풀리는 것이 아닌가? 본의원은 이렇게 생각하는데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합니까?

- 본의원이 얘기하는 것은 칠곡에서 구미로 이전하는 것이 맞지요?
- 칠곡에서 구미로 옮기는 것이 맞느냐고 제가 여쭙어 봤습니다.
- 그런데 본의원한테 제출된 자료에 보면 칠곡에서 구미로 가는 것으로 지금 자료에 나와 있으니까 다시 한 번 이것은 확인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 물론 여러 가지 내용상에 그런 문제가 있겠지요. 김관용 지사님께서 특별히 MOU체결과 관련해서 애를 많이 쓰시고 계시는 것을 저희들 알고 있습니다. 지난 1월 26일에는 저희들 영주에 소디푸 신소재가 영주 가온농공단지에 1,000억원 투자한다는 반가운 소식도 있습니다.

올해부터 2008년까지 1,000억원이 단계적으로 투입되는데 경북도는 신규고용창출 100명, 연간매출액 3,000억원 달성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이를 밝혔는데 이 견해는 여전히 지금도 유효합니까?

- 그때 누가 면담을 했습니까?
- 실무자가 면담을 해서 그쪽에서 고용을 밝혔습니까?
- 물론 밝히더라도 본부장님도 실무자가 하더라도 확인할 필요는 있겠지요?
- 본의원이 조사한 바에 따르면 고용창출 인원이 발표와는 달리 매우 낮다는 것입니다. 그리고 100여 명의 신규고용 창출이 이루어진다고 하는 그 근거는 다만 면담해서 나온 결과입니까?
- 알겠습니다. 간단하게 넘어가겠습니다. 본부장님하고는 영주에서 뵈고 자주 뵈는데 집중적으로 질문을 해서 죄송하게 생각합니다. 그리고 2006년도 8월에 대구에 전시컨벤션센터를 확장한다는 내용으로 대구시와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경북도가 향후 100억 원을 출자한다는 것을 합의한 바가 있지요.
- 그런데 얼마되지 않아 대구에서 한 시간 거리에 있는 경주시가

1,280억원의 사업비로 전시컨벤션 사업에 진출함에 따라 가뜩이나 포화상태에 있는 전시컨벤션 산업에 중복투자라는 논란이 있습니다. 알고 계십니까?

- 조치는 어떻게 했습니까? 보도를 보고.
- 우리 본부장님 오신 지 지금 얼마 되었습니까? 우리 지사님을 모시면서 상당히 애를 써시는 것을 본의원도 알고 있습니다. 궁금해서 이 관계를 여쭙어 보는데 논란에 있는 것에 대해서 이 양해각서는 무의미해질 가능성이 있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두 군대를 모두 투자하실 계획입니까?
- 경주도 그렇고 경북도 그렇고.
- 소관이 문제가 아니라 경북도에 투자통상본부장님께서는 시·군에도 다 확인을 서로하고 얘기도 나눌 필요가 있지요.
- 이 관계는 경제과학본부장님이 잠깐 설명을 해주시고요.
- 이 외에도 제가 질문할 것이 많이 있는데 일단 줄이겠습니다. 저희들은 늘 김관용 지사님에게 고맙게 생각을 합니다. 여러 가지 과정에서. 마지막으로 한 가지만 지금 본의원은 말씀드리는 것은 모든 것이 신중하게 접근을 해야 되고 양해각서에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견해를 본부장님께서 말씀해주세요.
- 사후관리 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니까 하겠다, 안 하겠다, 그것만 답변을 하세요.
- 이게 필요하다고 본의원이 본다는 얘기입니다. 앞으로 그런 체계로 할 수 있지요?
- 알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기획조정본부장님 답변해주세요.

북부권과 동해안 개발을 위한 대선공약 추진사업 건의와 관련하여 기획조정본부장님에게 몇 가지를 여쭙어 보는데 본의원이 동서5축 고속도로는 왜 대선공약 사업 추진에 빠져 있는지를 제가 물었습니다, 본질문에서.

그런데 2008년도 예산에 예비타당성 조사비 5억원을 요구하였다고 하는데 이것이 언제 완성될 수 있다고 봅니까?

- 그게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 본부장님 의지가 중요합니다.
- 동서5축 고속도로 예비 타당성 우리 본부장님께서 ‘반영을 시키도록 하겠다’.
- 약속을 꼭 지켜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나머지 대선공약 사업으로 추진하는 사업들은 이미 다른 사업이나 계획에서 언급한 것인데 구태여 건의할 필요가 있었습니까?

- 제가 아까 여쭙어 보가지고 답변을 들었을 때 대선공약 추진 사업에 건의를 했지 않습니까? 이게 원래는 2008년도 예산에 반영이 되었는데...
- 그런데 올해 경상북도가 밝힌 건교부 예산안에 따르면 상주, 안동, 영덕 간에 동서6축 고속도로 100억원을 비롯해서 동해중부선 철도부설 200억원이 추가로 반영된 바 있죠?
- 더욱이 봉화~울진 간에 36호선 국도건설에 이미 정부에 국토종합발전계획에 포함되어 올해 국도 4차로 공사비로 167억원이 이미 배정된 것도 알고 있어요?

- 그런데 특히 동해중부선 철도부설은 올해부터 용지보상에 들어가는 등 환동해권 중추 물류기능보강 프로젝트이기도 한데 이에 대해서 우리 본부장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 그런데 본의원이 질문을 할 때는 낙후된, 저희들이 낙후라는 말을 자꾸 써서 사실상 좀 괴롭습니다. 괴로운데, 사정이 이래서 본의원이 이제 북부권 11개 시·군과 협력을 강화해야 된다는 것을 요지로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답변에 보니까 23개 전 시·군과 함께 상생 발전한다는 것에 아주 원칙적인 답변을 하셨어요 보니까 답변내용에는 본의원은 그것을 부인하고자 하는 것은 아닌데, 실제로 이 북부권 11개 시·군에 대한 어떤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고 봐요. 어떻게 보십니까?
- 고맙습니다.
- 고생하셨습니다.
다음 우리 농수산국장님.
(○ 농수산국장 이태암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자료에 나온 것 보셨죠?
- 소 값 자꾸 떨어지니 잠이 안 온다는 내용도 보셨죠?
- 기분이 어떻습니까?
- 지역적인 것 하나만 좀 여쭙어 보겠습니다. 지금 산지 한우값이 얼마입니까?
- 지금 농가의 불안심리를 불식시키기 위한 현장위주의 축산대책을 추진을 하고 이에 축종별 생산자단체 및 농가가 참여한 총 5번의 대책협의회를 개최했다고 답변하셨죠?

○ 물론 이렇게 발 빠르게 대응하는 것도 중요합니다. 그러나 그보다 더 시급하다고 생각하는 것은 답변에서 이미 언급하였듯이 축산농가의 불안을 해소하고 앞으로 어떻게 FTA에 따른 피해에 대처할 것인지 알려주고 계획을 세우는 현장위주의 접근이 필요하다고 본 의원은 생각합니다. 현재 FTA 체결 이전보다 가격이 많이 떨어졌죠?

○ 그럼에도 최근 FTA 체결 이후 농가를 찾아다니면서 한우를 매입하는 문전거래 전문상인들이 곧 한우 값 폭락사태가 닥칠 것이라는 헛소문을 퍼뜨리고 시세보다 훨씬 낮은 가격에 출하하는 일이 비일비재하게 발생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을 세우고 계십니까?

○ 그래요. 하여튼 애 쓰시고 계시는데 오늘 신문에도 나고 지금 지역신문에도 나고 지금 축산농가 농민들은 잠을 못자고 있습니다. 그 사람들의 마음을 보듬어 주는 차원에서 대책을 좀 잘 세워주시기를 바랍니다.

○ 예,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다음 우리 교육국장님!

(○ 교육정책국장 이영우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우리 의사과에 누가 직원 잠깐만 와 보세요. 저기 우리 국장님께 잠깐 이 공문을 보여 드려보세요.

그 공문 결재하셨죠?

○ 그 도서출판 회사하고 교육청은 어떤 관계입니까?

○ 관계가 없는데 그 책을 강요할 수 있습니까? 교육청에서 학교에서

구입하라고 써 있죠?

○ 그런데 실제로 본의원한테 얘기가 들어오는 것은 저 뿐만 아니고 다른 의원님들도 그러실 것입니다. 교육청에서 강요입니다, 강요! 그런 얘기 들은 적이 있습니까?

○ 어떻게 조치하셨습니다?

○ 앞으로가 아니고 지금 그 얘기를 듣고 어떻게 조치를 했느냐고 지금 묻지 않습니까?

○ 그게 교육청에서 그 책을 구입하라고 보낸 것이 자율입니까?

○ 아니, 앞으로 이런 일이 없도록 하는 것은 좋은데 우리 국장님께서 듣고 교육감님한테 보고를 드렸습니까?

○ 그러면 교육감님도 알고 계십니까? 저 내용을?

(○ 교육감 조병인 관계공무원석에서 - 예, 알고 있습니다.)

그런데 그래 놓고 조치를 어떻게 했느냐고 제가 여쭙어 보았는데... 앞으로는 민간출판사와의 관계가 어떤지는 모르겠습니다마는 내려 보내지 마십시오.

○ 또 내려 보내게 되면 신경을 좀 쓰십시오. 일선 학교에 무슨 돈이 있습니까?

○ 일선 교육청은 무슨 돈이 있습니까?

○ 그러니까 그런 공문까지 내 보내고 장학사들이 전화를 하고 하면 교육청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구입을 해야지요. 물론 학생들한테 무료로 나누어 주는 것은 좋은 일입니다. 그러나 회사 자체가 민간회사 아닙니까?

○ 교육은 자발성과 창의성, 상호 협력을 통하여 이루어지며, 학교는

학교 구성원의 어떤 자율적인 의사결정으로 운영되어야 한다고
본의원은 생각합니다.

오늘 이 자리에서 교육감님께 뭐라고 하려는 것은 아니고 제가
그 공문을 보여드린 내용은 앞으로 자율에 있어서 향후 대책을
짚막하게 좀 밝혀주십사 해서입니다.

○ 고맙습니다. 들어가시죠.

본의원이 봤을 때는 몇 가지 보충이 더 있습니다마는 앞으로 차차
우리 의회를 운영하면서 상임위원회에서 또 하도록 하겠습니다.
끝까지 경청해주셔서 고맙습니다.

◎ 전찬걸 의원(교육환경위원회) ◎

존경하는 3백만 도민 여러분,

그리고 안순덕 부의장님과 선배 동료의원 여러분!

울진 출신 교육환경위원회 소속 전찬걸 의원입니다.

인사말은 인쇄물로 대체하고 바로 질문하겠습니다.

먼저 경북·대구 경제통합에 관한 질문입니다.

지금 세계는 생존수단으로 인근지역간 동질성을 찾아 협력하고 상생하려는 지역화 경향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서울을 중심으로 한 수도권 집중화가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어 지자체간 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협력체계를 더욱 강화할 필요성이 크게 대두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이러한 시대적 흐름에 따라 경북과 대구가 손을 잡고 대응하려는 것은 매우 의미가 있다고 보여집니다. 그러나 우리는 아직까지 경제통합 전에 해결해야 할 일들이 한두 가지가 아니며, 지금까지 경북과 대구는 여러 가지 업무를 통해 서로 상생의 길을 걸어왔는데 갑자기 경북과 대구의 경제통합만이 살길이라고 주장하는 데 대하여 당황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도지사께서는 지난 4월초 모 방송에 출연하여 경북과 대구 경제통합을 위하여 현재 19개 공동과제를 추진하고 있다고 밝히신 바 있는데 그 내용과 추진방향이 무엇이며, 그로 인해 우리 도가 얻게 될 성과는 어떤 것이 있는지 구체적으로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북·대구 경제통합을 주창하고 있는 대경연구원의 보고서를 보면 경제통합의 주체가 대구와 경북의 남부지역으로서

마치 대구의 경제발전을 위하여 경북이 대구로 통합되어야 된다는 방식으로 주장하는데 경북·대구 경제통합 주체는 어디이며, 누구를 위한 경제통합인지 분명히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이와 함께 경북 북부지역은 상대적으로 많이 낙후되어 있고, 경북·대구 경제통합의 권역밖에 위치한 것으로 인식되는데 그것이 사실인지, 사실이 아니라면 경북의 균형발전을 위한 계획과 특히 북부권 발전에 대한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또한 도지사께서 선거공약으로 추진하는 경북도청 이전이 계획대로 잘 진행되고 있어 도민의 한 사람으로서 기쁘게 생각합니다.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되면 경북과 대구의 경제문제도 수정해야 할 부분이 발생되리라 예상되기에 경북·대구 경제통합을 도청이전 예정지가 확정된 이후에 거론하고 추진해도 충분하다고 생각하는데 도지사님의 견해는 어떠하신지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영어마을 조성에 관한 질문입니다.

영어마을은 도지사와 교육감의 선거공약 사업으로 도와 교육청에서 각자 추진하려고 했던 사항을 본 의회에서 용역의뢰를 도지사에게 실시하게 하였으며 아직도 추진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만, 몇 가지 질문을 드리겠습니다.

용역은 도지사에게 했지만 실제로는 도교육감과 함께 의견을 공유하라는 의미도 포함되어 있는데 도지사와 도교육감께서 협의하기 위하여 어떠한 노력을 했으며, 그 결과는 어떻게 되었는지 도지사께서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그 용역이 현재 어떻게 진행되고 있는지 내용도 함께 밝혀 주시기 바라며, 또한 도지사님의 영어마을 조성사업 자체를 백지화 하고 도교육감에게 예산을 전출시켜 경북교육을 책임지고 계시는 교육감의 주관 하에 시행할 수 있도록 조치하실 의향은 없으신지도 함께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현재 지방자치단체장들의 경쟁적인 영어마을 조성과 관련하여 교육인적자원부에서 언론에 입장 표명한 내용을 보면 “교육인적자원부는 지방자치단체에서 운영하는 영어마을이 외국인에 대한 두려움을 해소하는 등 영어에 대한 학생들의 자신감을 심어줄 수 있다는 측면에서 긍정적으로 평가하면서도 투자 효율성에 대해서는 부정적인 입장이다. 대규모의 영어마을 설립보다는 단위학교별로 소규모로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는 게 훨씬 더 효율적이라는 입장이다.”라고 하였으며, 본의원의 생각도 대규모 영어마을이 결코 영어교육의 대안이 될 수 없다고 생각합니다.

현재 경상북도 지방자치단체별로 소규모의 영어체험센터를 운영하고 있으나 교사 확보와 예산 운영에 어려움이 많은데 교육감이 파악하고 계시는 운영실태가 어떠한지, 각 지역별 문제점을 해결하기 위한 대책 방안이 무엇인지 소상히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각 지방자치단체별로 시행하는 것을 권역별로 분할하여 운영할 수 있도록 지방자치단체장에게 협조를 구하는 등의 노력을 하여 예산낭비와 교사 확보에 효율성을 높이는데 앞장서실 의향은 없으신지 교육감의 견해를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끝으로 울진 지역 국책사업인 36번국도와 울진공항에 관한 질문

입니다.

울진지역의 국책사업인 국도7호선은 18년째 공사가 계속되고 있고, 국도36호선은 착공조차 하지 못하고 있으며, 울진공항은 당초 2004년 개항하려던 계획을 기약도 없이 계속 연기하고 있어 참으로 개탄스러운 실정입니다.

먼저 36번국도선에 관하여 살펴보면 1998년 실시설계하여 환경영향평가 완료시까지 8년이 걸렸으며, 39.83km의 공사구간을 올해부터 2019년까지 무려 12년 동안 공사하는 것으로 계획되어 있고 공사비는 6,693억원이 소요되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거기에다 당초에 4차선 계획이었으나 공사 전 구간중 2km만 4차선이고 나머지 구간은 2차선으로 되어 있어 울진군민들은 나라를 원망하고 있습니다.

이에 울진군민은 36번국도만은 7번국도와 같이 하세월 공사가 되어서는 안 된다는 각오아래 대정부 투쟁을 준비하고 있는 것은 도지사님도 잘 알고 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36번국도 확·포장 공사가 영주~소천은 4차선인데 소천~울진간은 2차선이 되는 것이 타당하다고 생각하시는지 소견을 말씀해주시고, 현재 2차선 공사를 4차선 확·포장으로 변경하여 추진하실 생각은 없으신지 말씀해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4차선으로 확·포장과 더불어 12년 공사를 5년 이내 조기에 완공하기를 군민들은 요망하고 있는데 그렇게 하실 의지는 없으신지와 대안은 무엇이며, 그렇게 추진하기 위하여 모든 행정력을 동원하실 의향은 없으신지 답변해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울진공항과 관련한 내용입니다.

울진공항은 1996년부터 시작하여 현재 토목, 건축분야는 완공하였는데 항해안전시설을 설치하지 않아 취항을 못하고 있으며, 총 1,317억 공사금액 중 1,109억원은 기 투자되어 약 85%의 공정을 한 후에 언제 완공될지 기약이 없는 상태임을 도지사께서도 잘 아시리라 생각합니다.

도지사께서는 울진공항을 어떻게 했으면 좋을 것인지 대안이 있으면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경상북도 지역공항 이용 항공사운송사업자 재정지원 조례를 울진공항에 적용하여 경상북도에서 항공사와 협약을 체결 후 울진군과 재정지원 비율을 조정해 소형 항공기라도 운항할 수 있도록 하는 방안과 울진공항을 군사용과 민간항공기를 겸한 공항으로 이용하는 방안 등도 있는데 도지사께서는 그렇게 추진해주실 수 있는지 견해를 밝혀주시기 바랍니다.

본의원의 주장을 적극적이고 긍정적으로 검토하여 답변해주시기 바라며 본의원의 질문을 마치겠습니다.

장시간 경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보충질문

- 보충질문 하기 전에, 교육감님, 국장님 한 분 어디 가셨죠?
(○ 교육정책국장 이영우 집행부석에서 - 교육위원회하고 의사 일정이 겹쳐져서 부교육감님하고 관리국장은 교육위원회에 참석

했습니다.)

아니 뭐요? 교육위원회에 지금 회의하고 있다는 말입니까? 우리 경상북도의회 회의일정은 1년 전에 나와 있는데 이거 어떻게 돼가지고 같이 겹칩니까? 교육위원회 일정은 누가 짭니까?

(○ 교육정책국장 이영우 집행부석에서 - 교육위원회 의사국에서 짜고 있습니다.)

아니 그거 협조도 안 갑니까? 경상북도의회 일정은 어떻게 돼 있어요? 교육청에서 경상북도의회 일정을 언제 받았습니까? 언제 받았어요?

(○ 교육정책국장 이영우 집행부석에서 - 예정된 의사일정은 저희들 미리 당초에 받았습시다.)

그래 연초에 우리 경상북도의회 일정은 나가는데 아니 교육청에서는 경상북도의회의 일정은 무시하고 교육위원회에 대해서는 우선적으로 시행한다는 말입니까? 뭐 이런 게 어디 있어요, 이런 법이 어디 있어요?

교육감님, 어떻게 생각합니까?

(○ 교육감 조병인 집행부석에서 - 그것은 저희들이 교육위원회에서 사정에 의해서 의사일정이 부득이 중복이 되어서...)

교육감님!

(○ 교육감 조병인 집행부석에서 - 제가 말씀 좀 드리겠습니다. 중복이 됐는데, 오늘 그래서 부교육감하고 기획관리국장은 교육위원회에 참석한다고 사전에 오늘 여기 불참한다는 불참계를 내서 승인 받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교육감님께서 미리 협조를 구했다고 말씀하시는데 이걸 협조를 구할 사항이 아닙니다. 경상북도의회 일정은 1년 연초에 발생되어 경상북도의회 일정대로 지금 움직이고 있고 그 일정을 참고해서 교육위원회 일정을 얼마든지 감안해서 다른 일정을 잡을 수도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걸 경상북도의회를 무시하는 처사라고밖에 본의원은 생각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교육감 조병인 집행부석에서 - 너무 그렇게 곡해는 하지 마시고요. 저희들 요즘 샌드위치 하는 얘기가 있습니다마는 저희들도 샌드위치가 돼 가지고 참 어렵습니다.(웃음) 의원님이 이해를 해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저희들 이 노력을 많이 했습니다.)

어려운 점이 있으리라고 인정은 합니다마는 앞으로 이렇게 해서 의사일정하면 교육감님 안됩니다.

(○ 교육감 조병인 집행부석에서 - 예, 그건 저희들이 절대 중복 안하도록 하려고 지금까지 계속적으로 노력하고 있습니다.)

예, 보충질문하겠습니다.

기획조정본부장님, 질문하기 전에 서면자료 제출을 조금 요구하겠는데요. 아까 도지사님께서 30건에 대해서 정책협력공동과제를 경상북도와 대구가 하고 있다고 그랬는데 구체적으로 그 내용을 서면으로 답변을 먼저 요구하겠습니다.

그리고 경북대구경제통합을 추진하게 되는 배경이 도지사님이나 아니면 공무원들의 생각에서 발생된 겁니까? 아니면 연구원에서 용역이라든가 연구원에 의해서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됐습니까? 배경이 어떻게 됩니까?

느끼고 어느 한 군데에서 얘기했다기보다도 전체적으로 필요하다고 봅니다.

- 대구경북입니까? 대구입니까?
- 대구경북에서 한 거예요?
- 본의원이 지금 가지고 있는 이 책은 대구경북연구원에서 2006년 1월 25일에 발행된 책입니다. 대구경북의 공동번영을 위한 경제 통합간담회 자료입니다. 여기 간담회 자료에 보면…

(자료를 들어 보이면서)

5쪽에 보면 제가 내용을 잠깐 읽겠습니다.

“향후 지역의 각계각층이 우선적으로 대구와 경북의 공동발전 및 영남권 경제공동체 실현에 전력하되 행정통합 논의는 지역 뿐 아니라 중앙정부, 나아가 정치권이 중지를 모아야 할 과제라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결국 행정통합 없이 완전한 대구경북의 공동 번영을 모색하기는 불가능하기에 이를 성취하기 위한 첫 단계로 경제통합에 대한 진지한 논의를 서두르고자 한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건 뭐냐 하면 결론적으로 경제통합이라는 제목 하에 행정통합을 하겠다라는 이 내용입니다. 저는 이 내용을 앞뒤로 다 읽어봐도 이거 그런 내용이거든요. 그리고 여기에 경제통합 로드맵이라고 돼 있어요. 여기에 보면 경제통합연구단 운영해가지고 열여섯 개 팀 및 자문위원을 2006년 1월달에 하고, 그 다음에 2006년 6월 정도 돼서 대경경제통합 비전을 제시하고, 그 다음에 대경경제협력에 관한 특별법 제정, 2007년 하반기입니다. 2008년 상반기에 대경지역

개발청을 발족하겠다, 그리고 2008년 말 돼서 영남권 경제협력 위원회를 발족하고,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영남권경제공동체 법제화 및 영남권경제개발청을 발족하겠다 이렇게 돼 있습니다. 이 내용은 대경연구원의 자료입니다. 그리고 경상북도에서 모든 연구용역은 지금 대경연구원에서 하는 걸로 알고 있는데요. 이 용역이라든가 추진하는 걸 봐 가지고는 대경연구원이 경상북도와 대구를 행정통합과 경제통합을 하겠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행정 통합하고 경제 통합하면 그 기구가 어떻게 됩니까? 하나가 됩니까? 따로따로 분리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 경상북도와 대구가 행정과 경제를 통합해버리면 경상북도와 대구가 따로 분리돼 가지고 존재할 수 있다고 생각합니까? 아니면 그게 행정과 경제가 통합되면 하나가 되는 것 같은데...
- 그래서 지금 본부장님 말씀대로 이걸 연구 내용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이것을 가지고 대경연구원이 이런 식으로 이끌어 가고 있어요. 분위기를 잡아가고 모든 바람을 그렇게 만들어가고 있는데 문제가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경북사람과 대구사람이 지금 경제통합에 대한 인식 차이가 바로 여기에서 나온다고 본의원 생각합니다.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용역을 안 주고 다른 지역에 용역을 한번 줄 생각은 없습니까?

- 통합이 아니고 경제관계 협력을 위한 방안에 대해서 대경연구원이 지금 주체돼 가지고 한다는 말입니다. 그러니 대경연구원에서 주체돼 하니까 결론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경제통합이고 행정 통합을 해야 산다, 결국적으로 이 대구경북경제통합이라는 그런

대의를 가지고 대경연구원 몸집 키우는 그런 방법으로밖에 이용하지 않는 것 같아요, 본의원 생각은. 그래서 대경연구원에 이러한 과제를 주지 말고 다른 대학교도 연구기관이 많잖아요. 대구경북은 서로 상생하고 같이 서로 협조하고 가야할 부분, 아니면 서로 틀리게 해 특색 있게 가야할 부분에 대해서 다른 기관에 용역해서 다른 결과의 내용을 받아볼 의향은 없으신지?

- 모양새가 아니고요,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이 대구경북, 경북과 대구의 방향을 그렇게 이끌어 가는데 문제가 있다는 거지, 그 자체가 용역을 똑바로 보고 바로 연구해서 거기에 대한 장단점 뭐 서로 비교해서 이렇게 해야 할 여러 가지 방향을 제시하는데 대해서는 문제가 없다는 말입니다.

그러나 지금 현재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이러한 큰 타이틀을 대경연구원이 이끌어가는 방향에서 문제가 있다는 거죠.

- 대경연구원에서 지금 방향은 대구를 중심으로 한 경북입니다. 그러니까 주체가 대구예요. 대구에서 경북을 생각하기 때문에 경북에서 보는 대구가 아니고 대구에서 보는 경북이기 때문에 지금 방향이 틀리고 그렇게 해서 전체적인 여론화를 형성해 가는데서 사람들의 생각이 바뀔 수가 있다는 얘기죠.

그래서 이웃 자치단체 간에 협조는 해야 됩니다. 또 상생해야 되는 것은 상생해야 되고, 거기에 대해서 본의원은 부정하는 것이 아닙니다. 단지 용역하는 방향이라든가 지금 어떤 이런 대경연구원에서 발표하는 논문내용이라든가 모든 것이 일방향으로 간다, 일방향으로 가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문제는 있다, 그래서

이걸 다른 방향으로 인식해서 해 줄 필요는 있지 않나? 이게 도 집행부에서 해줘야 될 방향이 아닌가? 그래서 질문드립니다.

- 그래서 본의원은 대구경북 경제통합이라는 이 타이틀 하나 가지고 대경연구원이 몸집을 불러서는 안 된다, 그리고 경상북도나 대구가 서로 상생할 수 있는 부분을 엄밀하게 검토해서 서로 상생하는 것은 맞되, 거기에 끌려가서 행정을 해서는 안 된다, 거기에 대해서는 상당히 위험성이 있다, 그리고 이 대경연구원이 주체가 대구에 있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대구를 기준으로 생각하는 부분이 상당히 많다, 거기에 대해서도 집행부가 알고 거기에 견제를 충분히 할 수 있는 능력을 갖추어야 되고, 그 다음에 도에 있는 공무원들도 실질적으로 대구에 주소를 많이 두고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같이 흡수되어서 그렇게 안 하면 안 되는 것 같이 밀고 나가서는 안 된다는 그런 걱정스러운 의미에서 질문을 드리는 겁니다.

- 수고하셨습니다.

그 다음에 영어마을에 대해서 교육청에 질문드리겠습니다.

국장님, 영어마을에서 지금 경상북도하고 협의를 한 내용이 어떤 내용을 협의했습니까?

- 지금 용역 하는 대경연구원에서 교육청과 도 집행부 간에 서로 협조가 안 되어서 용역하는 데 상당히 어려움이 있다고 합니다.
- 영어마을은 지금 용역중이기 때문에 그 용역결과가 나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용역하는 과정에서 짚고 해결해야 할 선과제들이 더 많다고 생각합니다. 이미 용역결과 나온 것을 가지고 다시

다르게 할 수는 없잖아요?

그래서 이것은 서로 긴밀한 협조가 있어야 되고, 긴밀한 협조 하에 영어마을에 대한 용역결과가 나와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지금 도지사님이 들어가셔서 그런 데, 도교육감님하고 도지사님하고 서로 영어마을에 대한 공동용역이 될 수 있도록 긴밀한 협조를 해주실 것을 이 자리를 빌어서 다시 한 번 강조 합니다.

꼭 그렇게 좀 해주실 수 있겠죠?

○ 적극 협조된 용역결과에 대해서 기대가 큼니다.

그리고 올바른 용역이 되고, 대상은 학생들입니다. 경상북도 학생 들한테 영어교육이 똑바로 될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협조해주시 기를 당부드리면서 보충질문을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부 록

□□ 조례안.....2

1.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2.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3.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4.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5.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전부개정조례안

□□ 승인·동의안.....4

1.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 기타안.....4

1.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 조례안 : 5건

□□ 조례안

-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 일부개정 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 지방공무원 정원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별표 4 한시정원표중 도정혁신팀란 존속기한 “2007. 6. 30”을 “2008. 6. 30”으로 한다.

부 칙

이 조례는 2007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별표 4] 한시 정원표(제6조 관련)			
도정혁신팀	14	일반직 : 4급 1, 5급 4, 6급 5, 7급 4	2007. 6. 30	2008. 6. 30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 예우 등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국가보훈기본법」 등 국가보훈관계법령에서 정하고 있는 국가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와 지원으로 6.25전쟁 당시 최후의 보루였던 경북도민의 자긍심과 나라 사랑 정신 함양에 이바지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희생·공헌자”라 함은 다음 각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목적을 위하여 특별히 희생하거나 공헌한 사람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이 정하는 적용대상요건에 해당하는 사람을 말한다.

가. 일제로부터 조국의 자주독립

나. 국가의 수호 또는 안전보장

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주의의 발전

라. 국민의 생명 또는 재산의 보호 등 공무수행

2. “보훈대상자”라 함은 희생·공헌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으로서 국가보훈관계법령의 적용대상자가 되어 예우 및 지원을 받는 독립유공자, 국가유공자와 그 유족 또는 가족 등을 말한다.
3. “참전유공자”라 함은 「참전유공자 예우에 관한 법률」 제2조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람을 말한다.
4. “국가보훈관계법령”이라 함은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한 예우 및 지원과 관련된 법령을 말한다.
5. “보훈단체”라 함은 국가보훈관계법령에 의하여 설립되었거나 국가보훈처장의 인가를 받아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단체를 말한다.
6. “참전자단체”라 함은 참전유공자의 명예 선양 또는 호국정신을 계승하기 위하여 설립된 경상북도 지역을 관할하는 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예우 및 지원 대상) 이 조례에 의한 예우 및 지원 대상은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와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주소를 두고 있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로 한다.

제4조(도민의 책무) 모든 도민은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을 존중하고 이를 선양하기 위한 국가와 도의 정책에 적극 협력하여야 한다.

제5조(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 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의 희생·공헌정신과 나라사랑 정신을 선양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예우 및 공훈선양 사업을

추진한다.

1. 각종 주요 행사시 순국선열 및 호국영령 등에 대한 묵념을 포함한 국민의례 실시
2. 각종 주요 행사에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를 우선적으로 초청하고 의전상의 예우 실시
3. 지역 인물록 등 향토지 발간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게재
4. 보훈관련 행사 개최시 지역출신 희생·공헌자의 공적 소개
5. 모범 보훈대상자 및 모범 참전유공자에 대한 포상·위로·격려
6. 공훈선양과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각종 보훈대상자와 참전유공자의 기념 및 문화행사 등에 대한 지원
7. 국가, 도 또는 민간단체 주관의 사적지, 현충시설의 건립과 정비사업 등에 대한 지원
8. 생존 희생·공헌자 및 참전유공자의 사망시 도지사 조문 및 위로
9. 공훈선양과 나라사랑 정신 선양, 보훈문화 창달을 위한 민족정기 및 공훈 선양사료의 발굴과 관련한 지원

제6조(보훈단체 등 지원)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예산의 범위 안에서 보훈단체 및 참전자단체에 예산을 지원할 수 있다.

1. 회원 권익신장과 단체운영 및 시설건립 등에 필요한 예산지원
2. 호국·보훈정신 함양 및 고취를 위한 독립운동 발상지, 전적지 등의 순례경비 지원

3. 자원봉사 사업 및 회원 복지향상을 위한 각종 사업비 지원

제7조(복지지원 등) 도지사는 보훈대상자 및 참전유공자에 대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관계법령이나 조례가 정한 범위 안에서 복지지원을 할 수 있다.

1. 도가 설치·관리하는 공공시설 내의 식료품, 사무용품 등 일상 생활용품의 판매를 위한 매점 운영, 자동판매기 설치 등의 허가 또는 위탁하는 경우 보훈대상자 또는 참전유공자의 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를 우선하여 반영
2. 독립공원 등 도가 설치·관리하는 시설의 사용료·입장료·주차료 감면
3. 도가 설립·관리하는 병·의원 등 의료기관에 대한 의료비 감면 및 무료 건강검진 지원
4. 독립유공자와 그 유·가족 무료 진료증 발급

제8조(참전명예수당) ①도지사는 도내 65세 이상의 참전유공자에게 참전의 명예를 기리기 위하여 참전명예수당을 지급할 수 있다. 다만, 「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 제1항 제4호·제6호·제7호·제8호에 해당하는 자로서 동법 제11조의 규정에 의한 보훈급여금을 받는 자 또는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7조 제7항의 규정에 의한 수당을 지급 받는 자는 제외한다.

②참전명예수당의 지급액·범위·방법 등 그 밖의 지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제9조(민간의 참여 조성)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와 참전유공자의

공훈과 나라사랑 정신의 선양 및 보훈문화의 창달 등을 위해 민간부문의 참여분위기 조성 등 여건마련에 노력하여야 한다.

제10조(관계기관에 대한 협조 요청) 도지사는 희생·공헌자와 참전 유공자에 대한 공훈 선양사업과 보훈문화 창달 등을 위하여 필요한 때에는 관계기관에 자료의 제출 등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

제11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거주외국인 지원 조례안

제 1 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조례는 경상북도(이하 “도”라 한다)에 거주하는 외국인들의 지역사회 적응과 생활편익 향상을 도모하고 자립 생활에 필요한 행정적 지원방안을 마련함으로써 지역사회의 일원으로 정착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용어의 정의) 이 조례에서 사용하는 용어의 정의는 다음과 같다.

1. “외국인”이라 함은 대한민국의 국적을 가지지 아니한 자를 말한다.
2. “거주외국인”이라 함은 거주의 목적을 가지고 90일 이상을 합법적으로 체류하고 있는 외국인을 말한다.
3. “외국인 가정”이라 함은 국내에 주소 또는 거소를 두고 있는 외국인과 혼인·입양 등 혈연관계로 이루어져 생계 또는 주거를

함께하는 공동체를 말한다.

4. “외국인 지원 단체”라 함은 거주외국인에 대한 지원을 주된 사업으로 하여 설립된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를 말한다.

제3조(거주외국인의 지위) ①도 거주외국인은 법령이나 다른 조례 등에서 제한하고 있지 않는 한 주민과 동일하게 도의 재산과 공공시설을 이용할 수 있고, 도의 각종 행정 혜택을 받을 수 있다.

②경상북도지사(이하 “도지사”라 한다)는 거주외국인이 지역 공동체의 구성원으로서 도 행정에 참여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4조(도의 책무) ①도지사는 관할 구역내 거주하는 외국인들이 지역사회에 조기에 정착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 거주외국인들이 지역주민과 함께 살아갈 수 있는 여건 형성을 위한 적절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②도지사는 지역에 거주하는 외국인의 수 등 외국인 지원시책 추진에 필요한 실태조사를 실시한다.

제5조(지원대상) 도내에 거주하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를 지원대상으로 한다. 다만, 「출입국관리법」 등에 의하여 대한민국에서 합법적으로 체류할 수 있는 법적지위를 가지지 아니한 외국인은 제외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
2. 한국 국적을 새롭게 취득한 자
3. 기타 한국어 등 한국문화와 생활에 익숙하지 아니한 자

제6조(지원의 범위) ①거주 외국인에 대한 지원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한국어 및 기초생활 적응 교육
2. 고충·생활·법률·취업 등 상담
3. 생활편의 제공 및 응급 구호
4. 거주외국인을 위한 문화·체육행사 개최
5. 외국인 가정에 대한 고용보조금 등 경제안정 정착을 위한 지원
6. 기타 거주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업 등

②도지사는 전항의 각호와 관련된 사업의 수행에 필요한 예산을 편성하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제2장 자문위원회

제7조(시책자문위원회의 설치) ①도지사는 제4조에 의한 외국인 지원시책에 대한 자문을 위하여 “경상북도거주외국인지원시책자문위원회”(이하 “위원회”라 한다)를 구성할 수 있다.

②위원회는 위원장 1인을 포함하여 25인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다음 각호의 자로 한다.

1. 당연직 위원 : 행정부지사, 경상북도의회 의원, 경상북도청·경상북도교육청·경상북도지방경찰청·대구지방노동청·대구출입국관리사무소 등 외국인관련 업무 부서장
2. 민간위원 : 외국인 지원 분야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와 거주외국인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자

③위원회는 행정부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부위원장은 위원중에서 호선한다.

④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임기는 2년으로 하되, 연임할 수 있다.

제8조(위원회의 기능) 위원회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되는 사항에 대하여 자문기능을 수행한다.

1. 거주외국인 및 외국인 가정에 대한 지원에 관한 사항
2. 외국인의 지역사회 적응 프로그램의 운영에 관한 사항
3. 다문화 존중의 지역공동체 형성 사업에 관한 사항
4. 기타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제9조(위원장) 위원장은 위원회를 대표하고 위원회의 업무를 총괄하며 위원장이 직무를 수행할 수 없는 경우에는 부위원장이 그 직무를 대행한다.

제10조(회의) ①도지사가 요구하거나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위원장은 회의를 소집하고 그 의장이 된다.

②위원회의 회의는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제11조(실비변상) 위원회의 회의에 출석한 위원에 대하여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경상북도 위원회 실비변상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참석수당 또는 여비를 지급할 수 있다.

제3장 외국인 지원 활성화

제12조(외국인 지원 단체에 대한 지원) 도지사는 외국인 지원 단체의 활동에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으며 「비영리민간

단체 지원법」에 의한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다.

제13조(업무의 위탁) ①도지사는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가 정하는 바에 따라 거주외국인의 지원을 목적으로 하는 비영리법인 또는 단체에 업무의 일부 또는 전부를 위탁할 수 있다.

②도지사는 전항의 규정에 의하여 소관업무를 위탁하였을 경우 위탁사무에 소요되는 비용의 지원과 지휘·감독은 「경상북도 사무의 민간위탁 촉진 및 관리 조례」 제4조 및 동 조례 제11조의 규정을 준용한다.

제14조(세계인의 날) ①도지사는 지역내 거주하는 외국인을 포용하고 문화적 다양성의 의미를 일깨우기 위해 매년 5월 20일을 “경상북도 세계인의 날”로 하고 세계인의 날로부터 1주간을 다문화주간으로 설정한다.

②전항의 규정에 의한 세계인의 날 및 다문화 주간을 기념하기 위하여 다음 각호의 행사를 실시할 수 있다.

1. 기념식 및 문화·예술·체육행사
2. 연구발표 및 국제교류행사
3. 명예도민증 수여, 유공자·단체(외국인 포함) 격려
4. 그 밖에 외국인 및 다문화에 대한 지역적 관심을 높이기 위한 행사

③도지사는 제2항에 의한 행사를 주관하며 필요한 경우 민간단체에게 행사를 추진하게 할 수 있다. 민간단체가 행사를 실시할 경우 도는 필요한 행정적·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제15조(포상) 도지사는 거주외국인 지원활동을 통하여 국가와 지역 사회에 기여한 공로가 크다고 인정되는 개인 또는 법인·단체에 대하여 포상할 수 있다.

제16조(외국인에 대한 표창) ①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외국인에 대하여 표창장을 수여할 수 있다.

1. 도 행정 또는 지역사회에 공헌이 현저한 경우
2. 외국인 지역사회통합 시책에 기여한 공적이 있는 경우

②표창을 행할 때에는 예산의 범위안에서 상금, 상패, 기타 부상을 수여할 수 있다.

③그 밖의 외국인 표창에 필요한 절차 등은 「경상북도 포상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7조(명예도민) ①도지사는 도정발전에 공로가 현저한 외국인에 대하여 명예도민으로 예우할 수 있다.

②명예도민으로서의 예우, 명예도민증 수여 등에 관한 사항은 「경상북도 명예도민증서 수여 조례」의 규정에 따른다.

제18조(시행규칙) 이 조례의 시행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규칙으로 정한다.

부 칙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에 관한 조례안

제1조(목적) 이 조례는 「대기환경보전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를 시행하는데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적용범위) 법 제63조의 규정에 의한 운행차 배출가스 정밀검사(이하 “정밀검사”라 한다)에 관하여 이 조례에 정한 것을 제외하고는 법·같은법 시행령·같은법 시행규칙 및 환경부고시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조(정밀검사) 포항시에 등록(「자동차관리법」 제5조 및 「건설기계관리법」 제3조의 규정에 의한 등록을 말한다)된 자동차의 소유자는 경상북도지사가 실시하는 정밀검사를 받아야 한다.

제4조(권한의 위임) 경상북도지사는 다음 각호의 권한을 포항시장에게 위임한다.

1. 법 제63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유효기간의 연장 및 정밀검사의 유예에 관한 업무

2. 법 제63조제3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의 명령에 관한 업무
3. 법 제92조제11호의 규정에 의한 벌칙에 관한 업무
4. 법 제94조제2항제6호의 규정에 의한 과태료 부과·징수에 관한 업무
5. 법 시행규칙 제92조의6제1항의 규정에 의한 정밀검사 미이행자에 대한 독촉

부 칙

이 조례는 2008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경상북도 조례 제 호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개정조례안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 일부를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제명 “경상북도의용소방대자녀장학금지급조례”를 “경상북도 의용소방대 자녀장학금 지급 조례”로 한다.

제5조 제2항을 삭제한다.

제6조 중 “120만원”을 “200만원”으로 한다.

부 칙

제1조(시행일)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

신·구조문 대비표

현 행	개 정 안	비 고
<p>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생략)</p> <p>②장학생은 <u>고등학생과 대학생의 비율이 3:1로 유지되도록 선발</u> 하되 <u>적격자가 없는 경우에는 정원 범위내에서 이를 조정할 수 있다.</u></p> <p>③(생략)</p>	<p>제5조(장학생의 정원) ①(현행과 같음)</p> <p>②<삭제></p> <p>③(현행과 같음)</p>	<p>자녀장학생 선발비율 삭제 (적격자 선발 효율화)</p>
<p>제6조(장학금액) 고등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공납금 전액으로 하며, 대학생에게 지급하는 장학금은 매년 <u>120만원</u>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신 설></u></p>	<p>제6조(장학금액).....</p> <p>.....</p> <p>.....</p> <p>.....<u>200만원</u>으로 한다.</p> <p style="text-align: center;"><u>부 칙</u></p> <p><u>제1조(시행일)</u> 이 조례는 공포한 날부터 시행한다.</p>	<p>대학생 장학금액 증액</p>

■ 승인 · 동의안 : 1건

□□ 승인 · 동의안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및 부족재원 확보를 위한 지방채 발행안을 이에 의결합니다.

경상북도의회의장 **이 상 천**

2007년 5월 25일

2007년도 지방채 발행안

I. 지방채 발행의 필요성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재원확보
- 필수사업 부족재원 확보
- 학생수용시설 및 교육환경개선사업의 원활한 추진

II. 법적근거

□□ 지방재정법 제11조(지방채의 발행) 제1항 및 제2항

- ①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그 지방자치단체의 항구적 이익이 되거나 긴급한 재난복구 등의 필요가 있는 때에는 지방채를 발행할 수 있다.
-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지방채를 발행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재정상황 및 채무규모 등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지방채 발행 한도액의 범위 안에서 지방의회의 의결을 얻어야 한다.

Ⅲ. 지방채 발행 계획

□□ 사업별 발행계획 : 53,184백만원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 23,184백만원
- 재정결함 보전 : 30,000백만원

□□ 차 입 선 : 금융기관채 증서차입

□□ 차입조건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연리 6.44%)
- 재정결함 보전 : 2년 거치 3년 분할상환(연리 6.44%)

□□ 상환부담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 국고
- 재정결함 보전 : 자체

□□ 차입시기 : 2007년도

- 이자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하여 차입 시기 적의 조정

※ 지방채 발행 총괄 내역

대상사업	지방채 발행예정액	지방채 발행 조건			비 고
		기 간	금리	상환부담	
명예퇴직수당	23,184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6.44%	국고	교육인적자원부 2007. 01. 16 승인 2007. 04. 05 승인
재정결합 보전	30,000	2년거치 3년 분할상환	6.44%	자체	예산총칙 제2조에 의한 지방채발행한도액 범위내
합 계	53,184				

※ 2007년도 교직원 명예퇴직수당 현황

(단위 : 천원)

구 분	2007도 명예퇴직 예정인원(명)	소 요 액
초등교사	212	12,488,658
중등교사	152	9,894,407
일 반 직	20	800,000
합 계	384	23,183,065

※ 2007년도 부족재원 사업별 현황

(단위 : 천원)

번호	사 업 명	소요액	본예산 편성액	부족액	지방채 발행대상액
1	사립학교 재정결함보조금	323,732,235	308,378,073	15,354,162	15,000,000
2	의무교육대상자 교과서 무상지원 (08년 1학기분 40% 반영)	9,517,846	6,350,758	3,167,088	3,000,000
3	지방교육혁신통합디지털 시스템 구축 (국고 대응투자 5:5)	2,370,868		2,370,868	2,000,000
4	농어촌 우수교 육성비 (6교, 국고 대응투자 5:5)	9,600,000	4,800,000	4,800,000	4,800,000
5	학교신설 및 이전비 (효자초, 금장초, 광평중)	15,195,770	11,965,583	3,230,187	3,200,000
6	초·중학교 학생수용시설비 (교실 42실, 계단실 2실)	6,502,168	4,479,998	2,022,170	2,000,000
	계	366,918,887	335,974,412	30,944,475	30,000,000

■ 기타안 : 1건

□□ 기타안

- 2006 회계연도 세입·세출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 연장의 건

의안 번호	
----------	--

제의 연월일 : 2007. 5.
제 의 자 : 경상북도의회의장

1. 주 문

경상북도의 2006회계연도 일반 및 특별회계 세입·세출 결산과 경상북도교육청의 2006회계연도 교육비특별회계 세입·세출결산 검사를 위하여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연장한다.

2. 제의사유

경상북도 결산검사위원 선임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4조제2항의 규정에 의거 검사기간 대비 업무 과다와 토요일무제 등 공휴일이 겹쳐서 검사 일정이 부족하고 현장 확인을 통한 보다 심도 있는 검사와 개선·발전적인 감사의견서 작성을 위하여 검사기간 연장이 불가피함.

3. 제의내용

2006회계연도 결산검사위원 위촉기간을 당초 20일간에서 25일간으로 다음과 같이 5일을 연장한다.

- 당초 기간 : 2007. 5. 14 ~ 6. 2 (20일간)
- 연장 기간 : 2007. 6. 3 ~ 6. 7 (5일간)

의정활동보고서

(제215회 임시회)



2007. 6 인쇄 / 2007. 6 발행

발행 / 경상북도의회

편집 / 의사담당관실

전화 : 602-5139

FAX : 602-5140



<비매품>